

2019
03



vol. 628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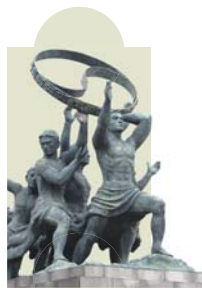


●
뜨거운 가슴으로



●
독립을 열망한

●
애국선열의 정신을



●
이어 갑니다



국회보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28, March 2019

[표지이야기]

뜨거운 가슴으로 독립을 외친
고결한 생의 기록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3월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생을 바친
애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깊이 새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발행일 2019년 3월 4일

발행인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편집인 이춘규 홍보기획관

국회홍보출판위원회

한공식 위원장(입법차장)

김승기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위원(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위원(기획조정실장)

이용준 위원(법제실장)

이상묵 간사(미디어담당관)

편집실무위원회

윤상은(보좌관), 제방훈(보좌관), 최정배(서기관)

편집실무진

글 김중해(취재보도 사무관), 김현아, 고영선, 박민선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용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지금 국회에서는

문화상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 정부 및 의회 지도부와 면담

문화상 국회의장, “의회외교 획기적으로 바뀐다”

국회사무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MOU 체결

특집_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의의

12 3·1운동은 대중적 자발성을 바탕으로 일어난
비폭력 평화시위_김정인

14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대한민국 탄생 기초가 된
3·1운동_윤경로

16 외교·무장·통합 독립운동의 근원이 된 3·1정신_이신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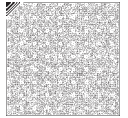
18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수립 본격화_이정은

20 민족운동이 총결집해 피어난 3·1운동은 민족
민주 혁명의 출발점_김용달

22 위원장 초대석_민병두 정무위원장
‘혁신의 디딤돌’ 놓는 정무위 만들 것

24 길에서 길을 찾다_강훈식 의원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첨단산업의 메카, 아산





- 28 칭찬합시다_김명연 의원
소외된 곳 돌보는 보건복지 전문가
- 30 나의 애송시_조원진 의원
부끄러움 없는 대한민국,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을 위해
- 32 나의 인생 나의 정치_강병원 의원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 약자를 위한 정치하겠습니다”
- 34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개성공단, 자사고 폐지 정책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38 법률 시대를 읽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_김양건
- 40 주재관 리포트
일왕의 생전 퇴위에 따른 왕위 승계의 의의_최은규
- 43 국회스케치
- 44 기고
영국의 브렉시트 동향과 영향_박세용
커뮤니케이션 혁명 이끄는 1인 미디어_이희대
- 48 법 시행 현장을 가다
‘산업안전보건법’
- 50 만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52 국회 뉴스
- 57 임시의정원 사람들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기초를 세운 손정도
- 60 경제이야기
나쁜 참새는 없다_이진우
- 62 취재수첩
‘극한국회’에서 기자들이 살아남는 법_부애리
- 64 미래과학을 읽다
‘라이프로그’로 만드는 맞춤형 개인비서_고호관
- 66 오천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수덕사 대웅전과 선(禪)의 미학_이광표
- 70 역사 속 길을 찾아
충효(忠孝)의 길_장태동
- 74 생활 속 우리말글
‘끄물끄물’과 ‘꾸물꾸물’_김미형
- 75 그때 그 사건
유신체제 비판한 ‘3·1민주구국선언’
- 76 정치 관련 주요 일지
- 78 편집 후기
애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_이춘규



문희상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 정부 및 의회 지도부와 면담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등 국회 대표단, 초당적 외교 펼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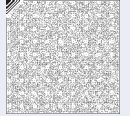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대표단 일행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5박 8일간 미국을 공식 방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새로 구성된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양국 의회 차원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순방 대표단은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외통위원장과 간사단 등 역대 최고위급 국회 대표로 구성됐다. 의회지도부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가동되는



케빈 매카시 미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국회 대표단

첫 대미 외교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설리번 미 국무장관 대행 및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만남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1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 헌화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미 국무부를 방문해 존 설리번 미 국무장관 대행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한국 국회의 초당적인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미 국무장관 대행은 “변화의 시기지만 한미 동맹은 흔들림이 없다”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는 중에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이루기 전까지 대북 경제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북한에서 있었던 협상에 대해 “이번(평양협상)이 실질적인 첫 실무회담이었다”고 밝혔다.

아틀랜틱 카운슬 주최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미국의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주최로 열린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등 주요 연구기관 한반도전문가들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이 북한 비핵화와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일방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하는



설리번 미 국무장관 대행 면담



코리아소사이어티 기조연설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한국의 역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분명한 대북지원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진정성을 미리 보여줘 핵 포기 결단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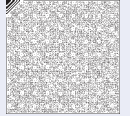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워싱턴 시내의 한 호텔에서 한인동포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교민들을 격려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달 27~28일 우리 민족의 명운을 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서 “당당함을 갖고 미래를 개척하는 가운데 통일 조국이 된다는 희망 속에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2일 미국 국회의 사당을 방문해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엘리엇 엥겔 하원 외무위원장을 각각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매카시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와 안보의 최고 중심가치이며 알파와 오메가”라며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된 이후라도 한미동맹은 계속돼야 하고, 동북아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면담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한미동맹 가치에 대한 양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미동맹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룰 수 없다”면서 “미래에도 동맹이 계속 강화돼야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3일 뉴욕으로 이동, 뉴욕 한인동포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교민들을 격려했다.

문화상 국회의장,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

2월 14일 문화상 국회의장은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 위해 전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은 피와 목숨으로 이어진 동맹 그 이상의 동맹”이라고 강조한 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결국 세계 평화 프로세스다. 핵 폐기시 북한에게는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문화상 국회의장은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 “(미 의회) 그들이 비관적인 생각에서 희망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양국 의회 간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기를 바라고 그것이 곧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촉진제가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유족과 오찬

이날 문화상 국회의장은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의 유족(손자며느리)인 홍창휴 여사와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상 국회의장은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기념해 추진되는 홍진 의장 흉상 건립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4월 10일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 홍창휴 여사를 초청했다. 이에 홍창휴 여사는 자신이 보관하던 임시의정원 관인 등을 국회에



문화상 국회의장이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의 유족인 홍창휴 여사와 오찬을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증하고, 기념식에 참석해 임시의정원의 현장 전문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월 15일 문화상 국회의장은 로스앤젤레스(LA)로 이동해 대한인 국민회관 및 USC 한국학연구소를 방문한 뒤, 미국의 저명언론인 ‘폭스 뉴스’(Fox News)와 인터뷰를 했다. 이후 문화상 국회의장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를 갖고 교민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마쳤다.

문화상 국회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강석호 위원장과 이수혁(더불어민주당)·김재경(자유한국당)·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간사, 진영(더불어민주당)·백승주(자유한국당)·박주현(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대(정의당) 의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 “의회외교 획기적으로 바뀐다”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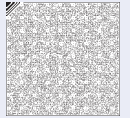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월 21일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국회 사랑채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는 운영관 위원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외 9명의 자문위원이 초청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방미성과와 2019년 의회외교 중점 추진방향을 설명한

후 외유성 출장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고 엄격한 사전 심사와 성과평가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은 그동안 준비해온 의회외교의 혁신방안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회외교가 획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중요한



문화상 국회의장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에서 '신뢰 받는 의회외교'를 당부하고 있다.

자리”라고 말했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의회외교는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의회외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회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외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의회외교 중점 추진방향 발표

이어 문화상 국회의장은 올해 의회외교 중점 추진방향으로 첫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미·중·일·러 등 주요 4강 의회인사 적극 초청·방문, 둘째,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포용성장 등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의회외교 전개, 셋째, 아세안·중남미·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와의 다자간 외교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회외교 외연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문화상 국회의장은 의회외교에 대한 그간의 제도

적 개선사항들을 소개했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지난 1월 의회외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첫째,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둘째, 특정현안 외교에 대해 자문위가 해외출장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정보공개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와서는 30일 안에 출장경비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해외출장에 대해 자문위에서 분기별로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가 다음 외교활동에 피드백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정비했다.

문화상 국회의장 “외유성 출장 논란 차단”

문화상 국회의장은 “이런 제도 개선으로 외유성 출장 논란은 사전에 전면 차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의회외교의 성과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평가와도 직결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앞으로도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의회외교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로써 의회외교가 보다 내실 있고 투명하게 추진됨과 동시에 공공외교의 한 축으로서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사무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MOU 체결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월 1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과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은 개인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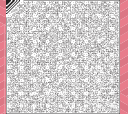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는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확대독서기, 특수작업의자, 휠

체어용 책상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서비스이고,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직장생활의 부수적인 업무를 돕기 위해 공단이 지원하는 인력 지원 서비스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MOU 체결로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공무원 및 장애인근로자의 근무여건과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종란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에서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및 장애인식 개선 확산에 더욱 기여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특집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의의



3·1운동은 대중적 자발성을 바탕으로 일어난 비폭력 평화시위	김정인 교수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대한민국 탄생 기초가 된 3·1운동	윤경로 교수
외교·무장·통합 독립운동의 근원이 된 3·1정신	이신철 교수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수립 본격화	이정은 회장
민족운동이 총결집해 피어난 3·1운동은 민족 민주 혁명의 출발점	김용달 소장

3·1운동은 대중적 자발성을 바탕으로 일어난 비폭력 평화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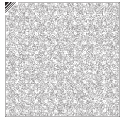
김정인 교수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1919년 3월 5일 서울 남대문역에서 학생들이 주동한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경신학교 3학년 조용석은 만세를 부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조선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다. 또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의 대우에 차이가 있다. 또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이 받고 있는 교육의 정도에도 차별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을 항상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독립을 하면 그런 불만이 없어질 것이므로 독립을 희망하는 것이다.”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조선총독은 마치 전제군주처럼 행정, 사법, 입법 삼권을 모두 장악했다. 한국인은 기본권조차 박탈당했고 민족 차별까지 감내해야 했다. 3·1운동은 바로 한국인들이 자유와 인권을 되찾고 차별 없는 평등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일으킨 항일운동이었다. 1918년 말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한 파리강화회의 개최를 목전에 두고 지식인들은 세계정세를 예의주시하며 독립운동을 모색하고 있었다. 상하이에서는 여운형이 파리강화회의에 신한청년당 대표로 김규식을 파견했다. 1919년 1월 18일 파리강화회의가 개막됐고 사흘 후인 1월 21일에는 고종이 급사했다. 2월 8일에는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8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국내외적 상황이 한국인의 독립 열망을 세계에 알릴 호기라고 판단한 종교인과 학생들이 본격적인 독립운동 모의에 나섰다.

마침내 2월 24일 천도교와 기독교가 함께 독립선언을 하는데 합의했고 불교도 합류했다. 거사일은 고종 장례식이 열리는 3월 3일 이틀 전인 3월 1일로 정했다. 학생들은 3월 5일 독자적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종교계에서 3월 1일 독립선언식을 거행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날도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2월 27일에는 천도교가 운영하는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3·1독립선언서’ 2만1천 매가 인쇄됐다. 다음 날인 2월 28일 천도교, 기독교, 불교 지도자들은 독립선언서를 전국에 배



포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한 후 행진하는 만세시위 방식으로 전달했다. 일찍부터 서울의 독립선언식 준비 소식을 알고 있는 도시들에서는 3월 1일 동시에 만세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우고 서울에서 제작한 독립선언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3월 1일 7개 도시에서 만세시위 일어나

3월 1일 정오에 제일 먼저 평안북도 선천에서 독립선언식이 거행됐다. 기독교계 신성학교에서 독립선언식을 치른 교사와 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시위를 벌였다. 천도교인들도 거리에서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평안남도 평양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천도교가 1시에 각각 고종봉도식을 거행하고 거리로 나와 연합시위를 벌였다. 평안남도 진남포에서는 오후 2시 신흥감리교회에서 기독교인들과 학생들이 고종봉도식을 거행한 후 독립선언식을 갖고 만세시위를 벌였다. 천도교인과 노동자들도 가담해 함께 행진했다. 같은 시간에 함경남도 원산에서도 때마침 장날을 맞아 기독교인과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시위를 벌였다.

서울에서도 오후 2시에 태화관과 탑골공원에서 각각 독립선언식이 거행됐다. 태화관에서는 민족대표 33명 중 29명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경찰에 알린 후 경무총감부에 끌려갔다. 탑골공원에서는 학생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독교 전도사인 정재용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이어 시위대는 독립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나와 만세시위를 벌였다. 서울 시민은 물론 고종 장례식에 참여하고자 상경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서울 시내에서는 오후 내내 만세시위가 이어졌다. 오후 2시 이후에도 두 도시에서 만세시위가 이어졌다. 2시 30분에는 평안북도 의주의 서부교회 광장에서 민족대표의 한 사람인 유여대의 지휘 아래 만세시위가 시작됐다. 오후 5시에는 평안남도 안주에서 동예배당의 청년 기독교

교인들이 거리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3월 1일 7개 도시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그 중 서울을 제외한 6개 도시가 북부지방에 있었다. 천도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을 준비한 만큼 천도교와 기독교 교세가 강했던 북부지방에서도 사전에 만세시위를 준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전국에서 만세시위 이어져

3월 1일 7개 도시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는 다음 날부터 인근지역으로 확산돼갔다. 3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81개 지역에서 147회의 만세시위가 일어났는데, 주로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함경남도에서 일어났다.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는 276회의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 중 평안남도 71회, 평안북도 45회, 황해도 28회, 함경남도 41회, 함경북도 12회인 데서 알 수 있듯이 70%가 넘는 시위가 북부지방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3·1운동이 서울과 북부지방에 자리한 6개 도시에서 발발했고, 북부지방이 3·1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남북분단으로 인해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3월 초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만세시위는 중순을 넘어서면서 중부와 남부 지방으로 번져나갔다. 만세시위는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절정을 이뤘다. 이때는 하루에만 전국에서 50~60여 회에 이르는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에서 만세시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지역은 9개 군에 불과했다.

3·1운동은 두 달 넘게 이어졌고 항일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시와 농촌, 어디에서든 신구 세대·세력의 구분 없이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동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만세시위는 3·1운동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어린이나 여성도 참여 가능한 비폭력 평화시위였다. 누구든 비폭력 평화시위인 만세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하는 대중적 자발성, 그것이 3·1운동의 전국화·일상화를 가능케 한 힘이었다. 📌

주권재민 (主權在民)의 대한민국 탄생 기초가 된 3·1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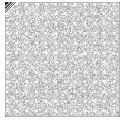
윤경로 교수
역사학자, 전 한성대 총장

필자는 “3·1운동은 세류(細流)가 모이고 쌓여 대하(大河)를 이룬 한민족 최대의 사건”이라고 정의해왔다. 우리나라가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단초(端初)는 1876년 2월 일본과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 체결로 시작된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 타율적(他律的)으로 맺어졌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정치사회적 운동들이 개항된 이후 여러 모양으로 추진됐다. 예컨대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전쟁은 물론 전국적으로 율기한 의병, 구국운동 및 각종 교육계몽운동 등 세류(細流)와 같은 여러 형태의 민족운동이 수없이 전개됐다. 그러나 결과는 좌절의 연속이었고 못내 1910년 8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제의 식민지배는 합법성을 가장한 매우 교활한 방법으로 자행됐다. 일제는 각종 협약과 협정 및 조약체결이라는 ‘근대적 도구’를 동원해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담보하는 교활한 식민화를 획책했다. 뿐만 아니다. 일제의 식민통치 실상은 매우 반인륜적이었다. 1910년 8월 22일(29일, 공포) 대한제국의 국권을 ‘영원하고도 완전하게 강점한’ 일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 조선(植民地 朝鮮)’으로 일본의 한 지방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반인륜적인 무단통치를 자행했다.

무단통치는 곧 헌병경찰제로서 초대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 밑에서 경찰사령관 겸 헌병사령관을 겸임했던 아카시(明石元二郎)는 훗날 조선에서의 무단통치를 ‘기포성산(碁布星散)’의 방법으로 통치했다고 ‘자랑’했다. 풀어 말하면 ‘바둑판에 바둑알 깔아놓듯 가을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들 모양’으로 조선반도 전국 각지에 일본군대와 경찰 및 헌병들을 깔아놓는 무단적 방법으로 통치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1919년 3월 1일의 독립만세운동은 전근대사회 왕조의 봉건성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함과 이후 밀어닥친 개항의 타율성 등으로 누적된 제반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세류와 같은 여러 모양의 운동들이 부침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대하(大河), 곧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이라는 큰 강을 이뤘던 것이다.



3·1운동은 민(民)이 주도한 ‘혁명’

그동안 지칭해온 ‘3·1운동’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요구된다. ‘3·1운동’의 역사성을 생각할 때 단순한 ‘운동’의 하나로 지칭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3·1 대 사건’을 비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앞서 언급했듯 1919년의 ‘3·1운동’은 개항 이후 왜곡된 타율적 근대화에 저항하는 여러 형태의 수많은 세류들, 즉 여러 모양의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그해 말까지 국내는 물론 북간도, 서간도, 연해주, 미주, 일본 등 한민족이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는 예외 없이 꺾기해 하나의 큰 강, 곧 대하를 이뤘던 것이다. 역사학계에서 이 사건을 한국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구분하는 시대 구분의 분기점으로 삼는 것도 이러한 ‘3·1운동’이 지닌 남다른 역사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유념할 때 지금까지 지칭해온 ‘3·1운동’이라는 용어는 이 사건의 역사적 무게를 충분하게 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3·1절을 ‘운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혁명’으로 볼 것인가 하는 열띤 ‘역사담론’이 그것이다. 담론 끝에 ‘3·1운동’을 ‘3·1혁명’으로 정명(正名)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러한 움직임만으로 국경일 명칭을 고칠 수는 없을 것이나 100주년을 맞으며 깊게 음미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잘 아는 대로 1919년 ‘만세사건’ 당시 명칭은 ‘소요’ 혹은 ‘폭동’이었다. 마치 1894년 반제반봉건(反帝反封建)의 기치를 높이 들고 꺾기한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난’이라 지칭한 예와 같다. ‘역사는 해석학’이라는 말이 있듯 과거의 사실(事實, facts) 그 자체는 한 점 한 획도 바꿀 수 없지만 역사적 사실(史實, historical fact)에 대한 해석은 ‘동학난’이 ‘동학농민혁명’으로 그 의미와 성격이 달라지듯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작금에 ‘3·1운동’을 ‘3·1혁명’으로 높여보자는 움직임도 이와 같은 맥락

에서라 하겠다.

역사용어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엄혹하고 치열했던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3·1운동’이 지닌 역사성은 ‘운동성’을 훨씬 넘은 ‘혁명성’이 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민족 내부의 기존체제를 전복한 ‘혁명’은 아니지만 누천년 내려오던 봉건왕조(大韓帝國)에서 백성이 주인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대한민국(大韓民國)의 탄생은 ‘3·1혁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즉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이 탄생한 것이다. 중국 역시 1911년 신해년(辛亥年)의 중화민국(中華民國) 탄생을 기려 ‘신해혁명’이라 하지 않는가.

민족의 꿈과 비전 제시한 ‘3·1독립선언서’

3·1거사의 이념과 정신은 ‘3·1독립선언서’에 잘 담겨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첫째 자주독립(自主獨立) 정신과 둘째 자유민주(自由民主) 정신, 셋째 인류공영(人類共榮)의 평화(平和) 정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꿈과 비전(Vision) 제시로 압축할 수 있다.

“아아 신천지(新天地)가 목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거(去)하고 도의의 시대가 래(來)하도다.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投射)하기 시(始)하도다”고 하며 이제 이후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음침한 옛집(古巢)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흔쾌한 부활’(欣快한 復活)의 빛을 향해 힘차게 나가자”는 희망찬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민족의 꿈과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능라도 5·1체육관에 모인 15만 명의 평양시민들 앞에서 남북이 지난 70년간을 떨어져 살았지만 우리 민족은 5천여 년 동안 함께 한 하나의 민족임을 천명함으로 큰 울림을 주었다. 바라는 ‘3·1혁명’ 100주년을 두고 국내는 물론 남북이 함께 하는 뜻깊은 100주년 공동행사가 꼭 성사됐으면 한다. 🇰🇷

외교·무장·통합 독립운동의 근원이 된 3·1정신



이신철 교수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3·1운동은 억압에 대한 저항이었다.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의 표출이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배에 대한 거부였다. 당시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했다. 또 그에 기반한 사회진화론이 식민지배논리의 근간을 이루었다. 우리 또한 천하를 호령하는 강대국이 되는 것이 그것을 극복하는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거대한 제국의 힘 앞에, 맥없이 무너져 버린 식민지 백성들로서는 당연한 생각의 귀결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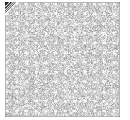
그렇지만 정작 3·1운동에 이르러 우리는 평등에 기초한 세계 만국의 평화를 요구했다. 그것이 강도 일본에게도 생명의 길임을 일갈했다. 그것이 민족 자결의 세계 대개조의 기운임을 설파했다. 제국 간의 거래와 위장된 평화가 아닌, 식민지 해방에 기반한 진정한 평화를 세계에 호소한 것이다.

3·1운동은 독립을 향한 선전포고

그래서 3·1운동의 주체들은 조선의 독립을 세계열강에 천명하고, 순리의 길대로 독립을 인정할 것을 만국평화회의에 요구하고자 했다. 그것은 세계 질서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각성이기도 했고, 제국에 대한 각성의 촉구이기도 했다. 그 같은 ‘외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곳곳에서 임시정부 수립 운동으로 이어졌고, 곧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비록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의 정식 인정을 받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교섭대상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광복군을 매개로 미국과 합동 작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같은 외교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3·1운동은 독립을 향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의 선전포고였다. 그것은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독립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는 맹서로 표명됐다. 일본이 세계 대개조의 기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력으로라도 독립 쟁취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던 것



이다.

이미 해외에 무장 투쟁의 기지를 두고 무력투쟁을 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3·1운동은 대진격의 명령이었다. 1920년 청산리에서의 대승리는 그 같은 명령에 대한 화답이었다. 만주에서는 신흥무관학교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의열단을 결성했다. 군대가 아니더라도 제국의 지도부와 주구들을 처단해 독립의 날을 앞당기겠다는 결의였다. 이후 러시아의 펄박을 받아 군대를 해산당하기도 하고, 세력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해방이 되는 그날까지 무장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조선의용대를 거쳐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지고, 만주에서도 무장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광복군과 함께 이 같은 무장투쟁은 모두 3·1운동의 실천에 다름 아니었다.

3·1운동은 거대한 민중의 힘에 대한 각성의 과정이었다. 3·1운동은 기독교와 천도교, 불교의 연합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투쟁을 이어간 것은 학생과 노동자 농민들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체는 여성이었다. 3·1운동은 민중의 힘을 보여줌과 동시에 각성된 민중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배움과 사상에 대한 갈망,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위한 무력의 준비로 나타났다.

일부 지식인들과 학생들은 새로운 세계혁명의 사상으로, 독립운동의 도구로 사회주의를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이제 갓 태어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농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들을 조직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학생들은 ‘민중 속으로(브 나로드)’를 외치며 농촌으로 뛰어 들었다.

때마침 중국에서도 반봉건 근대국가 수립운동이 한창이었다. 특히 광저우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혁명의 용광로와 같았다. 쑨원(孫文)은 새로운 공화국을 수립하고 봉건군벌 타도를 위해 중국이 하나가 될 것을 설파했다. 그는 혁명의 대의를 위해 사회주의자들과도 연합했다. 1차

국공합작이었다(1924년). 신생국 소련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혁명 간부를 양성할 대학(현 중산대학)과 군관학교(황포군관학교)가 설립됐다. 이 소식은 중국 전역으로 퍼졌고 각지에서 청년들이 몰려들었다. 독립의 길을 찾아 중국에 들어가 있던 한인 청년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희망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중국 당국에 한인 청년들의 입학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쑨원은 임시정부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중산대학과 황포군관학교에는 수백 명의 한인 청년들이 모여 들었다. 장제스(蔣介石)가 국공합작을 파기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그에 대한 항한 ‘광저우 기의(起義)’가 일어났을 때, 200여 명의 한인 청년들이 중국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전사했다. 그들은 중국 혁명보다도 대한의 독립과 대한의 혁명을 위해 싸웠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그들을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3·1운동의 통합정신 면면히 이어져야

3·1운동은 대통합 대동단결 운동이었다. 3·1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종교는 달랐지만, 함께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지식인과 민중이 갈라서지 않았다. 청년과 어른이 다르지 않았다. 여학생들이 주도한 경우가 많았지만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다.

임시정부에서 통합을 논의할 때마다 3·1정신의 계승이 주창됐다. 무장투쟁의 현장에서도 3·1정신은 면면히 계승됐다. 3·1운동의 정신은 그렇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가리지 않았던 통합의 정신으로 계승돼 왔다. 비록 그 실천에서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지만, 그것은 독립운동의 근간이 되는 정신이었고, 통합의 정신을 추구하는 원천이었다. 1948년 남북협상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심적으로 참여한 것은 3·1정신의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통일 한반도의 꿈은 3·1정신의 계승과 실천에 다름 아니다.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수립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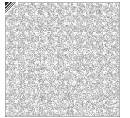
이정은 회장
(사) 3·1운동기념사업회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였다. 그러나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까지 세력을 뻗쳐오자 조선은 더 이상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있을 수 없었다. 19세기 전반 60년, 다가오는 대외적 위기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했던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세도정치, 부정부패로 지새우다 위기에 봉착했다.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동학농민운동(1894) 등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고종은 왕권 안보를 위해 청국군의 도움을 요청했다. 청일전쟁은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위해 청국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승리한 일본은 1895년 명성황후 참살, 생명에 위협을 느낀 국왕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 신변 위탁(아관파천), 외국세력의 조선 이권 침탈 등 국가와 국권, 국익의 위기상황이 계속됐다. 국왕 1인이 지배하는 전제주의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국왕 고종은 실추된 국가 위신을 만회하기 위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올랐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국권수호운동과 의회수립운동

1898년 3월에 촉발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국권수호운동은 의회수립운동으로 나아갔다. 국가위기 타개를 위해 국민 의사 수렴과 힘의 결집이 절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광무황제(고종)는 의회 설립으로 황제권 약화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거듭된 만민공동회의 압박에 마침내 1898년 11월 28일 중추원을 의회로 개조해 이승만 등 50인의 의관(議官: 오늘날 국회의원)을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처음엔 50명 의원 중 황제가 2분의 1 임명, 독립협회가 2분의 1인 25명을 선거한다는 안이었다. 그러나 황제 측은 민선의원을 3분의 1인 17명으로 줄였다. 그러나 그마저도 설립 한 달도 안 된 12월 25일 독립협회와 함께 폐쇄되고, 의회수립운동을 주도했던 이승만 등은 투옥됐다. 그리고 황제는 이듬해인 1899년 7월 14일 ‘대한국 국제(國制)’를 반포했다. “대한제국의 주권은 앞으로 영구불변하게 황제에게 있음”을 선포한 것이었다. 민의에 대한 반동이었다. 그 후 6년 만에 대한제국은 을사조약, 그리고 5년 후 한일병합조약에 의해 사라졌다.



1905년 을사조약 후 미주동포를 중심으로 “황제가 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론’이 본격 대두됐다. 미국의 안창호와 공립협회 임원들이 국내로 들어와 신민회 운동을 전개했다. 신민회는 황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화제를 표방하지는 못했으나, 공화제를 포함한 문명적 가치, 교육과 경제적 자립, 납세 등의 의무를 통한 민주국가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가르침으로써 공화제 준비를 했다.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자 미주 한인사회에서 “한국 국 멸망은 곧 (국민주권의) 신한국 시작”으로 받아들였다. 임시정부 건설론이 본격 제기됐다. 박용만은 무형국가론(1911)을 제기했고, 미주 한인들은 하와이 합성협회 등을 통합해 해외 한인 최고 기관이자 임시정부 격인 대한민국 민회 중앙총회를 결성했다(1912. 11). 대한민국민회는 만주와 시베리아, 미주 및 하와이에 지방총회, 멕시코 등지에 지방회를 두고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성해 동포를 보호하며 독립운동을 조직화했다.

그 시기 청국에서는 1911년 10월 신해혁명이 일어나 황제체제가 무너지고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독일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의 군국주의적 전제국가에 대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민주국가가 대결했다. 대전은 민주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대전의 와중에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차르체제 또한 붕괴됐다. 이와 같은 내외적 대변화에 부응해 신규식 등 해외 독립운동가 14명이 ‘대동단결선언’(1917)을 제기했다. 이 선언은 1910년 순종의 주권 포기는 곧 국민에 대한 주권양여로 보고, 재외 동포가 민족대회의를 개최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이었다.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전후 독일(바이마르공화국), 오스트리아(제1차 공화국), 터키에 공화국이 수립됐다. 세계에 공화정의 시대가 본격 도래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던 차 1919년 1월 21일 광무황제(고종)가 승하했다. 고종의 서거는 조선과 대한제국 500년간 왕과 황

제의 시대가 최종적으로 ‘사망’했음을 의미했다.

1919년 3월 1일 국장을 이틀 앞두고 국민들은 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범민족적인 3·1운동에 나섰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전 민족이 하나가 되어 일본의 총칼 앞에 두려움 없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자유와 독립을 요구했다. 그와 동시에 3월 17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4월 23일 서울에서 한성정부 수립이 선포됐다. 이들 모두 민주공화정을 표방함으로써 국민주권론과 공화정이라는 민족적 요구와 세계사적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에서 임시의정원 구성

1919년 4월 10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에 위치한 2층 양옥에 독립운동가 29인이 모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국무총리와 각료를 임명해 임시정부를 출범시켰으며,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 공포했다. 이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제1조)이라 선포해, 국민주권의 국체와 정체를 밝히는 등 10개 조의 건국 정신과 기본 원칙을 천명했다.

5개월 뒤 연해주 대한국민의회와 한성정부가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됐다. 그 후 광복의 그날까지 27년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유지됐다.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 피란 이동시대의 고난을 겪었으나, 일제가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을 도발해 중국 내륙에까지 세력을 뻗쳐오자 만주와 북경 일대 독립운동 세력들이 중경으로 옮겨간 임시정부로 집결, 통합해 명실공히 독립운동의 중심이자 대표기관이 됐다.

해방 후 민족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해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 오늘날 세계에 빛나는 대한민국에 이르고 있다. 🏠

민족운동이 총결집해 피어난 3·1운동은 민족 민주혁명의 출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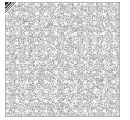
김용달 소장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흔히 ‘3·1운동은 호수’라고 한다. 한국 근현대사에 갖는 3·1운동의 의의를 잘 표현한 말이다. 왜냐하면 3·1운동 이전의 모든 민족운동이 모여들어 3·1운동이라는 큰 호수를 만들었고, 3·1운동 이후의 모든 민족운동은 3·1운동이라는 큰 호수에서 발원하는 탓이다. 더 중요한 것은 3·1운동이라는 호수가 단순히 물리적 결합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화학적 통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 근대사에서 민족운동은 크게 두 흐름이 존재했다. 하나는 의병운동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계몽운동의 흐름이었다. 이들 두 맥락은 운동의 주체와 이념 그리고 투쟁방식 등에서 차이가 많았다. 의병운동의 주체는 유림을 중심으로 농민대중이 결합을 이뤘고, 그 이념도 반(反)침략 척사(斥邪)사상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운동방식도 즉각적 무장투쟁이었다. 이에 비해 계몽운동의 주체는 개화파를 중심으로 시민층이 참여했고, 그 이념도 근대 개화사상으로 운동방식도 장기적 실력양성이었다.

근대민족운동의 두 흐름은 경술국치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일제의 완전 식민지로 전락한 경술국치 이후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이제 반침략 자주화도 반봉건 근대화도 함께 이뤄가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즈음에 의병계열과 계몽계열의 민족운동이 합류하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흥무관학교 등 만주에 세워진 무관학교와 국내의 광복회 등 혁명적 비밀결사였다. 두 계열은 서로의 사상과 운동방식을 주고받으며 협작을 이뤄간 것이다.

3·1운동은 이 같은 민족운동이 총결집해 피어났다. 그래서 만세운동의 마당에는 종교편견도, 지역갈등도, 남녀노소도, 지위고하(地位高下)도, 반상귀천(班常貴賤)도, 지주와 소작농의 위화감도 없었다. 오직 조국독립과 민족자주를 갈망하는 열기만 가득했다. 3·1운동은 삼천리방방곡곡에서 무려 1천 500여 회나 전개됐고, 여기에는 종교인·학생·교사·유생·상공인·농민과 노동자 등 각계각층 200여만 명이 동참했다. 가히 전국적이며 거족적인 독립운동이었던 것이다.



특히 만세운동의 현장에서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국민의 자주민임’을 선언한 2천만 민족의 지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부정하고 민족정권을 세운 것이다. 그것도 고조선 이래 대한제국까지 이어진 전제군주국이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 실로 민족혁명이자 민주혁명의 출발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국제열강에 ‘대한의 독립과 자주’를 구걸하거나 청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언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로써 ‘비타협 절대독립론’이 바른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정립되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채택한 민주공화제도 서구 자유주의를 수용하기도 했지만, 여기에 우리식 국민주권주의인 ‘황제주권포기(拋棄) 국민주권수수(授受)설’을 창안해 수립됐다.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도도한 물줄기로 민주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회인 ‘임시의정원’과 행정부인 ‘임시정부’를 통해 제도는 물론 실제적으로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민주주의 역사를 쫓아갔다.

3·1운동으로 본격적인 독립운동 전개돼

3·1운동은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무장독립운동을 고조시켰다. 3·1운동으로 민족의식이 고양된 청장년들이 독립군 부대에 참여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독립운동의 역사에 빛나는 봉오동·청산리대첩도 이로써 가능했다. 국내에서도 3·1운동은 민족대중의 항일투쟁을 한층 고조시켰다. 3·1운동으로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이 고양된 노동자와 농민과 학생 등 대다수 민중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농민운동도, 노동운동도, 학생운동도, 문화운동도 사회운동이자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3·1운동 직후 반제(反帝) 이념으로 수용된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의 전파는 독립운동의 이념은 물론 주체와 지향을 더욱 풍성하게 하며, 민

주사회의 기본 원칙인 다양성을 한층 강화했다.

인도주의와 비폭력 평화주의 독립운동의 첫 포문

지구상의 인구 가운데 4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도주의에 대한 성찰을 가져왔다. 야만의 정글법칙에 맞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를 숭상하는 ‘인간의 길’을 내세운 인도주의가 부상한 것이다.

세계사에서 인도주의와 비폭력 평화주의 독립운동으로 첫 포문을 연 것이 바로 3·1운동이다. 그래서 3·1운동은 ‘일본의 소의(少義)함을 책(責)하려’ 함이 아니며, 오직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대기운에 순응 병진’하고, ‘전 인류 공존동생(共存同生)권의 정당한 발동’이라고 한 것이다. 그야말로 불의에 대항해 정의, 침략에 대항해 평화, 억압에 대항해 자유, 야만에 대항해 인도주의를 부르짖은 3·1운동은 한 줄기 신선한 동방의 빛이 됐다. 국제사회에서 제국주의 지배하에 신음하던 식민지·반(半)식민지 국가와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촉발한 것이다.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은 물론 간디와 네루가 중심이 된 인도 국민회의파의 무저항·비폭력 저항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는 3·1운동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을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고 예견했다. 네루도 옥중에서 “자유를 되찾기 위해 수없이 죽어 갔고 수없이 일본 경찰에 구속됐지만, 그들의 이상을 위해 희생하고 순국하는 한국민족의 용감한 투쟁을 본받으라”고 자신의 딸 인디라 간디에게 말했다.

오늘에도 3·1정신은 절실하게 요구된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가 정치판을 흔들고, 해묵은 좌우 이념갈등이 여전하고, 경제위기 속에서 계층과 계급 간의 위화감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지금이야말로 대동단결해 3·1운동을 일으키고, 한마음 한뜻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 선열의 지혜를 되새길 때다. 

‘혁신의 디딤돌’ 놓는 정무위 만들 것

정무위원회의 소관 부처는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국가보훈처, 규제개혁의 일익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반부패청렴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 등이다. 한국경제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재벌개혁과 혁신성장은 물론 금융개혁과 소비자 보호 등을 다루고 있어 상임위가 열리면 뉴스의 중심은 정치보다 경제 문제가 되기 십상이다. 일례로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에 통과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기업의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어서 큰 관심을 모았다.



민병두 정무위원장

민병두 위원장은 제17대국회에 첫 등원했지만 그 이전에도 정치를 관찰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언론사 정치전문기자를 거쳐 정치부장을 지내는 동안 정치권에 수많은 개혁을 주문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민단체가 국회를 감시하게 한 것도 민병두 위원장의 작품이다.

민 위원장은 “흔히 삼권분립이라고 하면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말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라며 “국회의사당에 공무원과 기자만 출입하던 시절,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시민단체가 참여하게 한 ‘사건’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늘 어젠다(의제)를 만들고 상황타개와 해법을 찾는 고민을 습관처럼 해 온 결과 ‘전략통’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는 “이제는 ‘전략’을 ‘정책’으로 바꾸는 데 힘쓰고 있다”고 했다.

3월은 봄맞이 달이다. 한반도의 뉴스가 온통 남북관계에 쏠리는 지금 신춘인사를 부탁했더니 망설임 없이 “신춘은 따뜻함인데 한반도의 따뜻한 기운인 ‘평화’가 꽃소식과 함께 오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우리는 남북 분단으로 ‘정치적인 섬’에서 살고 있다”며 “통일이 되면 청소년들이 자전거로, 자동차로, 기차로 대륙을 향해 달리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며 통일이 가져올 미래를 펼쳐 보였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위원회 현안 중 하나인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 찾기에 대해 설명했다.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는 규제혁신에서 나온다고며 우리 기업의 오랜 관행인 수직계열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1등 기업이 영원한 1등 기업으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 순위는 우리와 달리 끊임없는 경쟁



으로 늘 바뀝니다. 삼성 휴대폰의 경우 부품을 그룹 계열사에서 납품받기 때문에 휴대폰 가격을 낮추려면 가격 후려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이폰은 세계 어디서나 최고의 부품을 갖다 쓰는 ‘열린 경쟁’을 하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세상이 원하는’ 무엇을 만든 빌 게이츠나, ‘세상에 없던’ 무엇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도록 경제의 열린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통과된 규제혁신 관련법을 비롯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활성화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혁신성장에 나서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들이 빛나는 입법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런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려면 여야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협치’가 우리 정치의 화두인 이유다. 민병두 위원장은 정치인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첫째가 입법가(lawmaker)이고, 두 번째는 선전가(advertiser), 세 번째는 관망자 또는 구경꾼(spectator), 네 번째는 마지못해 하는 생계형(reluctant)이라고 했다.

“저는 위원장 취임 일성(一聲)으로 위원님들이 제출한 법안 하나하나가 빛나는 입법이 되도록, 그리고 빛나는 입법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주 1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자고 강조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른바 ‘생활입법’을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규제혁신 관련법안 등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장은 올해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서민을 위한 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잘못 송금한 돈은 되돌려받게 했고 사금융이 부당한 연체자를 받지 못하게 하며 카드수수료 인하로 서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며 ‘생활형 제도개혁’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리고 공정거래의 분쟁 조사권과 조정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 업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원회는 구조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불공정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원만하게 조정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규제 권한 중 조사권과 조정권 등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개방할 경우 갑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한 조사와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리라 봅니다. 조정권의 경우는 일부 지자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약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실리콘밸리는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이고 북유럽은 ‘따뜻한 미래가 먼저 오는 곳’이라고 한다. 저는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낙오자가 없고, 인생 2모작이 가능하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미래가 가장 먼저 오는 복지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목표를 따뜻한 미래를 가장 먼저 맞이하도록 하는 것으로 삼는다면 여야 간의 크고 작은 차이들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지 당을 위해 싸워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영논리에 빠지게 되면 정치를 작고 좁게 가두게 되고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지금 걷고 있는 발자국이 후세에 어떤 이정표가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

글. 김종해 사진. 김지범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첨단산업의 메카, 아산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움츠려 지냈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온다. 그래서인지 모처럼 날씨도 화창하다.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경칩을 앞두고 충남 아산으로 떠났다. 마침 이날은 KTX 천안아산역에서 멀지 않은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설화중학교 졸업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졸업생들을 위한 축하를 하는 강훈식 의원을 만나러 설화중학교로 향했다. 학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으로 들뜬 졸업생들과 가족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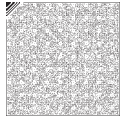


단상에 선 강훈식 의원은 3·1 만세운동 이후 고향인 충남 병천에서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꺼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강 의원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친 유관순 열사가 걸었던 길을 상기시키며 “세상은 바뀌었고, 우리에게는 ‘가수 유관순’도, ‘대통령 유관순’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내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강 의원은 최근 여당 의원 32명과 함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과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추구 및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평균 연령 38세 ‘비상하는 젊은 도시’ 아산

강훈식 의원은 이어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찾았다. 그는 “삼성 휴대폰의 액정(LCD)을 만드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아산은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차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입주해, 첨단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아산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전체 직원(국내) 2만4천여 명 중 1만7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





현충사에서



설화중학교에서 졸업생들과 함께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으며, 관련 협력사도 130여 개사에 달한다. 현대자동차도 아산에 축구장 243배에 달하는 크기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두고 있다. 이곳에는 약 4천 명의 직원들이 오가며 그랜저·쏘나타 등 현대차 주력 차종을 연간 30만 대 가량 생산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아산은 평균 연령 38세의 젊은 도시”라며 “일자리가 있으니 젊은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젊은 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아산시의 인구는 2019년 1월 현재 약 31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1999년(약 18만 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강 의원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사회에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투자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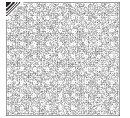
강 의원은 “저희 옆집 이웃분은 서울 여의도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며 “교통으로 봤을 때 아산은 이제 거의 수도권 생활권”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역에서 천안아산역까지는 35분 남짓 걸린다. 그는 “2020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인주역이 들어서면 아산에서 여의도까지

40분이 걸린다. 예산 1천억 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 밖에도 아산 신도시 재추진, 천안아산 KTX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 ‘더 살기 좋은 아산’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다.

현충사에서 민생을 생각하다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현충사는 조선 전기의 무신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의 사당으로, 사적 제155호다. 1706년 아산 유생들이 조정에 건의하여 세웠으며 이듬해 사액(賜額) 현충사(顯忠祠)를 받았다. 강 의원은 정문인 ‘충무문’에서 20분 남짓 걸어 현충사에 도착했다. 그는 매년 1월 초면 현충사를 찾아 참배를 한다고 한다. 이날도 조용히 제향을 하고, 참배를 한 뒤 현충사를 둘러봤다.

현충사까지 올라가면서 강훈식 의원의 지역 정치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그의 관심사는 한 곳에 쏠려 있었다. 바로 ‘민생’이다. 그는 매주 둘째, 넷째주 토요일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민원정책 제안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오만가지 정책 제안과 민원이 다 나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역구 시·도의원들 모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힘을 실어드리려는 것입니다. 보통 4~5시간 이상 걸립니다. 과거에는 사적관계로 해결했던 문제들을 공적인 관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광고도 한 적 없는데 끊이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주십니다.”

“지방 산다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 만들고 싶어”

2005년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꼽은 공세리(貢稅里) 성당을 찾았다. 충청남도 지정기념물 144호다. 공세리 성당이 위치한 곳은 충청도 일대에서 거둬들인 세곡 창고가 있던 곳이다. 공세리라는 지명도 여기에서 왔다. 붉은 벽돌과 뾰족한 지붕이 어우러져 이국의 성당 같기도 하다. 드라마 ‘모래시계’ 등 70여 편이 넘는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등이 촬

영됐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2016년 분구로 생긴 ‘아산시율’ 지역구의 첫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당선 전부터 경제 현안, 부동산 정책, 남북관계 등 현안에 대한 탁월한 논리력으로 무장한 그는 다수의 방송 토론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여당의 첫 원내대변인을 거쳐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그를 “젊지만 말이 앞서지 않는, 실력 있는 의원”이라 평한다. 그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강훈식 의원은 두 번 연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수도권 중심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마디로, 지방에 산다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

충남 아산 / 글. 박민선 사진. 김진원



공세리 성당



유의동 의원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소외된 곳 돌보는 보건복지 전문가

지난달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이었던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은 다음 주자로 김명연 의원을 추천했다. 유의동 의원은 “김명연 의원은 7년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실 정도로 보건복지 분야에 정통한 분이다. 정책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낮은 자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온 분이고 의원이 된 후에도 줄곧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복지에 힘을 쏟고 계신다. 그분의 진정성, 열정, 전문성, 식견을 존경한다”고 칭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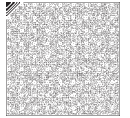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제도 개선해야

김명연 의원은 유의동 의원의 칭찬에 대해 “친형제처럼 지내다 지금은 다른 정당에 있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 내가 앞선 순서였다면 다음 의원으로 유의동 의원을 칭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안산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명연 의원은 이후 제19대·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김명연 의원은 국회 입성 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활동하고 있다. 한 상임위원회만 맡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명연 의원은 “전문성 때문이다. 쉽지 않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또 지역구에 보건복지 분야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다. 한 우물만 파다 보니 이제는 정부 담당자라든지 관련 민간 전문가들과 소통도 잘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연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는 커다란 회의 테이블





블이 있는데 탁자에 ‘노인/장애인/축산/인구/소상공인’이라는 명패가 각각 놓여 있다. 분야를 나눠 자료를 분류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는 공간이라고 한다. 김명연 의원은 “우리 보좌진이 나눠 맡고 있는 분야다. 한눈에 이슈를 파악할 수 있고 언제든 누구라도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연 의원은 한 분야만 판 전문가답게 관련 법 개정에도 적극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기금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연금 운용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국민연금 운영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일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다 보니 2018년 3월 말까지 완료됐어야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8월에야 완료됐다.

김명연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운영

계획 제출 일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며 “법률에 근거해 국민연금의 면밀한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막는 한편 건전한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명연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슷한 취지로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한을 법률에 명시, 이를 정부가 준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에는 거주 외국인만 7만 명이 넘을 정도로 외국인이 많다. 김명연 의원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200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 기준 약 3.9%에 달한다.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에 힘을 쏟을 생각이다.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도자 의원을 추천합니다

김명연 의원은 다음 칭찬 주자로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을 추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도자 의원에 대해 김명연 의원은 ‘우리 최도자 누님’이라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쟁점이 많은 위원회로 부딪치기 시작하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위원회예요. 바른미래당 간사이신 최도자 의원이 중간에서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율을 잘하십니다. 아마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최도자 의원을 좋아하고 고마워할 겁니다. 구수한 사투리도 매력적입니다. 보육 전문가로서 보육인에 대한 처우와 정부 평가제도의 개선에 힘쓰시는 등 많은 바 역할도 잘하고 계시고요. 따뜻한 리더십을 갖춘, 능력이 출중한 의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 고영선 사진. 김진원

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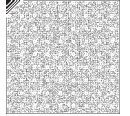
윤 동 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 동 주 (1917~1945)

만주 간도성 화룡현 명동촌에서 출생. 평양 숭실중학교 시절 신사참배 강요에 항의하여 자퇴하고 고향인 용정으로 돌아와 광명학원 중학부에 편입했다. 서울 연희전문학교 문과에서 발행하는 '문우(文友)'지에 '우물속의 자화상', '새로운 길'을 발표했으며 1942년 도쿄 릿쿄(立教)대학 문학부 영문과와 교토 도시샤(同志社)대학 영문학과에서 수학했다. 1944년 독립운동 죄목으로 2년형을 선고받고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스물 여덟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부끄러움 없는 대한민국,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을 위해

윤동주의 서시는 많은 국민의 애송시이고 어렵고 고통받는 현실을 이겨내고 자 하는 분들에게 희망과 같은 시이다. 한번 읊게 되면 머릿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중독성이 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천재 시인이 있다고 한들 윤동주의 서시만큼 인간의 고뇌, 번뇌, 순수함, 고귀함, 사랑, 열정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을까.

윤동주의 서시를 고등학교 학창시절 배웠다고 하면 최근 윤동주의 서시를 다시 가슴 속에 품게 된 배경에는 태극기가 있다.

윤동주의 서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애송시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로 시작하는 서시는 양심 앞에 정직과 결백한 신념을 드러낸 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시절 개정 사립학교법 무효 투쟁을 할 때도 윤동주의 서시를 읊었다고 한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위로를 받는다”며 윤동주의 ‘서시’를 애송시로 소개한 적이 있다.

2016년 가을부터 나돌기 시작한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고쳤다, 정유라가 숨겨 놓 딸이다, 세월호 7시간에 특정인물과 밀회를 가졌다, 성형시술을 하고 굿판을 벌였다, 거울방에 살고 있다, 김연아가 늘봄제조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다, 해외에 숨겨놓 돈이 수십조가 된다,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최순실을 통해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 등등은 가짜뉴스에 불과하다.



조원진 의원
대한애국당, 대구 달서구병

태극기 운동은 진실과 사랑을 위한 투쟁의 길

태극기 집회가 서울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지 2년 반이 되었다. 무려 110차 태극기 집회가 한주도 빠지지 않고 서울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적게는 수만, 많게는 수십만이 모여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찾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거짓은 진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대한민국과 태극기를 보면서 다짐한다. 🏠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 약자를 위한 정치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노무현 대통령후보 수행비서,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강병원 의원은 제20대총선 당시 보수당의 텃밭으로 불렸던 은평구을에서 5선의 거물 정치인을 누르고 국회입성에 성공했다. ‘젊은 일꾼’ 강병원 의원을 국회보가 만났다.

모범생에서 학생운동 혁신의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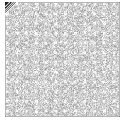
강병원 의원은 전북 고창에서 2남 중 막내로 태어났다.

“제가 네 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자 젊은 나이에 홀로 되신 어머니는 형과 저를 할아버지댁에 맡기고 서울로 돈을 벌러 가셨습니다. 식모살이를 하시며 돈을 모은 어머니가 단칸방을 구하신 후 저희 형제를 서울로 데려오셨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후 줄곧 은평구에서 학교를 다니며 성장했습니다.”

강병원 의원의 어머니는 은평구 연신내에 ‘행운식당’이라는 자그마한 식당을 열어 형제를 키웠다. 학창시절 그는 학교가 끝나면 부리나케 식당으로 달려가 음식을 나르고 배달을 하고 저녁에는 매상 장부를 정리했다.

“일을 도와드리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학생으로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모범생이던 강병원 의원이 서울대에 합격하자 이웃들



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데모하지 말라”는 당부를 수도 없이 했다.

“하지만 저는 선배들과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면서 점점 학생운동에 깊숙이 관여하게 됐습니다. 1989년 5·18투쟁이 끝나고 학생회실에 모여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평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1993년 말 강병원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동구의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학생운동의 이념 경직성과 투쟁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는 쇠파이프와 화염병 대신 평화적인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학생운동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강병원 의원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이듬해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 총학생회장 임기를 마친 그는 군대 대신 감옥을 선택했던 과거 총학생회장들과 달리 현역 입대를 결정했다.

“제가 서울대 역대 총학생회장 중 수배를 받지 않은 첫 학생회장이었습니다.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운동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배받을 일이 없었던 것이지요. 서울대 총학생회장 중 최초로 현역으로 입대한다고 여기저기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후보 수행비서와 창업, 그리고 정치 도전

제대 후 대우에서 근무하다 벤처기업을 다니던 그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사표를 쓴다.

“노무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은 없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게 전부였는데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작정 여의도에 있는 캠프로 찾아

갔는데 용케도 받아주시더군요. 수행비서로 발탁돼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전국을 다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행정관으로 5년간 청와대에 몸담았던 그는 청와대를 나온 후 미장방수기술을 배워 건설업체를 창업했다. “내 일을 해보고 싶어서”였다.

그 후 강병원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서울시 정부부시장을 역임한 임종석 전 의원을, 본선에서는 5선의 여당 현역 의원을 제치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첫 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을 대표발의해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이어 2017년에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또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을 발의해 젊은 일꾼의 면모를 과시했다.

강병원 의원의 의정활동 목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선거운동 당시 제 슬로건이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몇 년을 떨어져 살던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된 그때가 제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행운식당은 그런 행복한 기억을 담고 있는 곳이자, 성실한 삶의 자세와 서민의 아픔을 몸으로 배웠던 곳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꿈꿨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제 정치의 이정표로 삼겠다는 다짐으로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아들’을 슬로건으로 선택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임진완

개성공단, 자사고 폐지정책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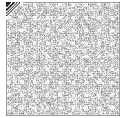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혹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진짜 매물을 올리면 손해 보는 중개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전속·공동중개 제도로 허위매물이 근본적으로 방지되는 시스템이지만 수수료가 매매가의 5~6%에 이르고 중개업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처벌하고 감시하기 전에 선량한 중개업자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자정 방안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물 표시·광고가 까다로워지고 제재가 강화되다 보니 공인중개사들의 반대가 거셌다. 박광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은 “중개는 사고파는 사람의 흥정인 데다 부동산 매물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허위매물은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현실을 무시하고 선량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엘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기획팀장은 “매물을 올릴 때 현장 등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KISO 허위매물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거래 후 방치매물 등을 걸러내는 사후 검증까지 갖추고 규제당국의 실질적 시정조치나 제재를 강화한다면 검증 시스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김한표·홍문종·이학재·곽상도·김현아·전희경 의원(이상 자유한국당)은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사고 폐지정책 문제점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42개 자사고 가운데 57%인 24곳이 올해 ‘운영성과 평가’를 앞둔 가운데 열렸다.

교육 당국은 이번 평가를 통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평가지표를 까다롭게 조정하고 재지정 기준점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오세목 서울 중동고 교장(자사고연합회장)은 “자사고 평가계획을 살펴보면 이번 평가는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 전략”이라면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장은 “교육부가 평가지표를 조정하면서 자사고와 사립협회는 물론 사전예고도 없었다”면서 “올해 운영성과 평가를 받을 서울 자사고들이 새 평가지표를 토대로 자체평가를 수행해본 결과 모두 탈락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자율이 교육의 본질”이라면서 “자사고 폐지정책은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자사고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해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를 포함해야 한다”면서 “재능있는 빈곤층 학생에게도 엘리트 교육 기회가 제공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장은 “자사고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유발 등 ‘역기능’을 발생시켰다”면서 “정부는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해소를 위해 고교체제 개편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공동으로 2월 11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정부가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폐쇄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약

속하고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남북 경협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면제될 수 있다. 올해 여름쯤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개성공단 재개를 가로막는 난관으로 ‘실질적인 비핵화를 망설이는 북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대북 제재 완화·해제 어려움’ 등을 꼽았다.

홍 실장은 개성공단이 국가안보 위협 완화, 국가신인도 제고 등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통일비용을 절감하며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보루”라며 “북한의 안보 우려를 줄여 북한 정권이 핵을 개발하는 동기를 축소시켜 북핵 문제 해결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은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보며 정부를 신뢰하는 가운데 3년간 ‘희망고문’을 견뎌왔는데, 더 버티기 힘든 막다른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유보 결정을 내려 억울하게 ‘버려진 자식’ 같은 공단”을 계속 방치하고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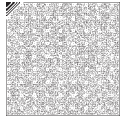
이날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개성공단 정상화뿐 아니라 파산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을 위한 생존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

장병완·김경진 의원(이상 민주평화당)은 2월 11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 유학 와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특별귀화 문호를 넓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현재 학술분야에서 우수인재 특별귀화 신청 기준은 4년제 대학교수이거나 5년 이상 연구기관 재직경력이 있는 연구원이다. 다만 외국국적동포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경력자면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분야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처럼 기준이 높은 탓에 학술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자는 2016년 18명, 2017년 8명, 2018년 12명 등 10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잠재 성장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의 하나로



국적제도 개정을 통해서 인재를 유입하자는 제안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내 대졸 학위 외 국인을 ‘우수인재’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다른 방안들도 제시됐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는 “경력, 소득수준, 수출실적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 법률, 의료, 종교, 전문기술 등 기존 우수인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야를 신설·확대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우수인재 기준 완화와 분야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비교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재열 법무부 국적과 과장은 “우수인재가 자국 국적을 포기하는 일반귀화를 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우수인재 귀화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이들은 병역의무를 지지 않고 의료 혜택 등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해 귀화자 수를 관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2월 13일 박완주·이규희·윤일규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유관순정신 계승사업회를 비롯해 충청남도·천안시·천안시의회 등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국회에서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유 열사는 1962년 독립운동가에게 부여되는 서훈 5등급 중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공적에 비해 서훈 등급이 낮아 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은 초창기 독립유공자 발굴이 지도자 중심으로 이뤄져 유 열사의 공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심 소장은 “여성독립운동가의 훈격은 초기 발굴 시점인 1962년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유 열사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서훈 등급이 낮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만철 전 공주대 총장은 “유 열사의 활동이 프랑스의 역사적 영웅 잔 다르크에 비유되는 만큼 그동안 저평가됐던 그의 존재 가치를 재인식하고 국제적 인지도 제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은 “(유 열사의 서훈을 높이는 것에 대해) 학계에서는 염려가 크다. 단순히 인기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을 정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박민선

원청 책임 강화로 산업재해 예방의 패러다임 전환 계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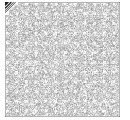


김양건 수석전문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알려진 이 법이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고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데 일주일 남짓 짧은 시간이 걸렸지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2018년 11월 초에도 법률의 개정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었으나, 규제적 성격이 강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마련된 정부안이 당초 노사 간에 합의를 보았던 내용에서 변경된 점 등을 들어 노사 간에, 그리고 여야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전부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던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급박하게 시작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월 19일 제1차 고용노동소위를 시작으로 5차례의 법안 심사를 진행했고 12월 27일에도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여야 3당 정책위의장·환노위 간사 간의 막판 회동을 거쳐 본회의가 진행 중인 오후 6 시경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극적으로 의결했다. 곧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도급’의 정의 등을 수정해 의결했고, 본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었던 구조를 원청의 책임 범위를 강화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게까지 산업안전 보호망을 확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법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신설하는 등 법률이 담아낸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주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와 도급인 책임 범위의 확대

첫째,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으면 도급을 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도급작업이나 수은·납 제련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산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예외적으로 일시적·간헐적 작업 또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도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행위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안전관리 측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둘째, 개정안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에게 해야 하는 수준과 동일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즉,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는 도급인 자신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에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의역 사고나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에서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및 원청의 책임 강화 등

셋째,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업을 이용하는 배달종사자 등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가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은 ‘일하는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했으나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로써 근로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해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향후 대상을 넓혀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포괄해 향후 노동관계법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넷째, 앞서와 같이 도급인의 책임 장소를 확대함과 동시에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는 하향 조정됐으나, 현행 규정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는 상향됐다. 이 밖에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징역형의 하한선, 가중처벌 규정 및 수감 명령 제도의 도입 여부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했다.

향후 과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기존에 계류돼 있던 여러 의안을 동시에 검토했고, 하나의 대안으로 완성시키기까지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과 여러 정치적 과정이 결합됐다. 입법과정이 복잡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외면해왔던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떨쳐버릴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법 시행 전까지,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가다듬어야 할 것이며 산업현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새롭게 시행될 법률의 내용에 맞춰 산업현장에 평화가 정착되는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일왕의 생전 퇴위에 따른 왕위 승계의 의의



최은규 일본주재관

아키히토 일왕(텐노)이 2019년 4월 30일에 퇴위한다. 이러한 생전 퇴위는 헌정 사상 최초이며, 일본 역사상 약 200년 만의 일이다. 2016년 8월 8일, 현 아키히토 일왕이 고령 및 건강문제로 국사행위 및 상징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을 언급한 후 일본 국회는 2017년 6월 9일 현 일왕에 한정해 퇴위를 가능케 하는 황실전범(典範)특례법을 제정했다.

일본헌법 제1조(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및 황실전범 제4조(천황이 서거한 때는 황사(皇嗣, 코우시)가 바로 즉위한다)의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왕위계승은 왕이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왕의 의사(意思) 등에 근거한 생전 퇴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생전 퇴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는, 국회에서의 정부의 답변을 보면, ①상황(上皇, 조코)·법황(法皇)과 같은 존재에 의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 ②천황의 자유의사에 근거하지 않는 퇴위강제의 염려, ③천황의 자의적 퇴위와 상징천황제와의 관계 등이 제기돼왔다(제123회 국회참의원내각위원회회의록 제4호 14쪽, 궁내청 차장 답변).

일왕의 퇴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2019년 5월 1일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일왕에 즉위하면서 현 아키히토 일왕은 ‘상황(上皇, 조코)’, 왕비는 ‘상황후(上皇后, 조코고)’로 불릴 예정이며 새로운 일왕의 즉위에 따른 원호(현재는 ‘헤이세이’라는 원호 사용)도 변경된다.

이 특례법안은 제정 과정에서 법안제정과 새로운 원호의 선정에 관련된 헌법적 논란과 보수파와의 대립이 있어왔으며, 정부의 법률안 제출 전에 각 당당이 중·참 양 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과 함께 논의해, 국회의 총의를 종합하는 과정을 거쳤고, 중의원에서는 의원운영위원회에서 정부제출법안을 69년 만에 심의하는 등 그 성립까지 매우 특이한 과정을 거쳤다.



생전 퇴위에 관한 특례법의 쟁점

특례법의 입법과정에서 각 정당에 의한 전체회의가 어떠한 위치와 존재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이해 대해 일본정부는 헌법 제1조에 나타난 대로 일왕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이기에,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는 것을 고려해 이번 일왕의 퇴위과 관련, 각 정당이 상징천황제를 규정한 헌법을 기본으로 하여, 국민대표기관인 입법부의 주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일왕의 생전 퇴위의 의사표명이 일왕의 정치적 권능의 행사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일왕으로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국민에게 전한 것이지 퇴위의 의향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하여, 헌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될 염려는 없다고 했다.

기타 사항으로는, 나루히토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하게 됨에 따라, 차기 왕위승계순위 제1위가 되는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의 후미히토친왕(현 아키히토 일왕의 둘째 아들)의 지위에 대해서는, 왕가(미야케)의 가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왕세자라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왕위승계순위 제1위의 왕족인 코우시(皇嗣)에 합당한 조직과 예산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일왕 권한의 변천

최초의 일왕은 기록상 기원전 660년에 즉위한 진무 일왕이다. 그러나 진무일왕 즉위 기록은 후대에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일왕제가 성립된 것은 7세기경으로 추정된다. 귀족·무인 정치체제였던 중·근세에는 지위가 하락했다가,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중앙집권체제

가 확립되면서 1889년 2월 제정한 일본제국헌법에서 일왕을 통치권자이자 신성한 존재로 규정했다. 이후 1946년 1월 1일 쇼와(昭和)일왕의 이른바 ‘인간선언’을 계기로 1946년 11월 새로이 제정된 일본국헌법에서는 일왕을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적 존재로 규정했다.

일왕은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이며(헌법 제1조), 헌법에 정해진 일정한 국사(國事)행위 이외의 국정(國政)에 관한 권리의 주장과 행사는 불가하다(헌법 제4조). 정치적으로도 엄정 중립, 어떠한 정치 문제에도 불관여한다. 일왕 및 왕족은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일왕과 왕족을 함께 부를 때는 황실이라고 함). 국사에 관한 일왕의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각에 귀속된다.

현재 헌법에 정해진 일왕의 국사행위로는, ①총리대신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임명, ②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③국회 소집, ④중의원 해산, ⑤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⑥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관리의 임면, 전권 위임장, 대사 및 공사관의 신임장 인증, ⑦사면, 특사, 감형, 형집행 면제 및 복권의 인증, ⑧영전의 수여, ⑨비준서, 기타 법률이 정하는 외교 문서의 인증, ⑩외국대사 및 공사의 접수, ⑪의식 거행 등이 있다.

원호에 대해서

왕위 승계에 따라 2019년 5월 1일 새로운 원호(元号)가 사용된다. 서기 645년 즉위한 제36대 고토쿠 일왕 시대의 다이카(大化) 이래, 1300년 이상 지속된 원호는 왕위 계승 직후 새롭게 원호를 정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한 명의 일왕이 수차례 기원(紀元)하기도 했으나, 메이지 이후 1세1원제(1世1元制)가 확립됐다. 지금

까지 247개의 원호가 사용됐고, 최장기간 사용 원호는 63년간 사용된 쇼와(昭和)다.

메이지헌법 하에서 원호의 제정절차를 규정한 구황실전범과 등극령은 일본의 패전 후 1947년 5월에 폐지됐다. 그 후 1979년 새로운 원호법(일본명 원호법)이 성립되기까지 일본의 원호제도는 30년 이상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인 관습인 상태가 지속됐다.

이는 패전 후 신헌법제정시에 미군부가 ‘원호제는 일왕제를 명료하게 한다. 연도를 세는 권위로서 일왕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여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후 1970년대 들어 당시 일왕이 사망하게 되면 원호도 소멸하게 될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종교단체지도자와 보수계 문화인들이 ‘일본을 지키는 모임(현재 일본회의의 원류)’을 구성하고, 국가에 원호의 법제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사민·공산당 등 천황제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한 국민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1979년 6월 원호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1989년 1월 쇼와일왕이 사망 후, 원호법(원호법에 따르면 원호는 정령(내각에 의한 명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전의 246개의 원호는 일왕이 정했으나 1989년의 원호(헤이세이)는 일왕이 아닌 일본 내각이 결정한 원호이다)에 근거해 처음으로 원호가 개정됐다.

원호법 성립 이후, 두 번째로 개원(改元)되는 신 원호의 사전공표를 두고 정부와 보수파의 대립이 있었다. 일본정부는 원호가 바뀜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원 1개월 전에 공표하기로 했는데, 자민당 보수파는 원호는 일왕과

일체불가분이라는 전통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5월 1일 새로운 일왕의 즉위 후에 공포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연금급부 등 정보시스템의 준비 기간으로 1개월이 필요하다고 해 최종적으로 4월 1일에 결정·공포하기로 했다.

새로운 일왕의 즉위

일왕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국민들 또한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에서 새로운 일왕이 즉위하고 원호가 바뀌는 것에 대한 일본 국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원호를 일왕의 권위와 결부시키고 있는 보수층은 원호의 발표가 현 일왕의 퇴임 한 달전에 발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강한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 국민의 기대감과는 별도로 일왕은 헌법상 상징적 왕으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왕위승계에 따른 일본 내 정치적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호는 일본 내 행정기관, 기업, 학교 등 다양한 기관의 각종 공문서 등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등 일반국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원호의 제정은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일본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새로운 원호가 어떤 것일지에 그칠 뿐, 전 세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양력과의 병기나 통합, 분리사용문제, 원호 개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정보시스템의 개보수) 등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



태극기

유관순 열사가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고향인
충남 천안 목천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극기이다.
※(사)대한민국 국기선양회가 그 진위성을 인정함.(2000.6.3)

- 기증 : 손세일 의원(제11·14·15대)
- 크기 : 가로 100cm, 세로 75cm

유관순 열사의 결기어린 태극기

누렇게 빛이 바래 낡았지만 그 세월만큼 결기가 엿보이는 태극기를 소개합니다. 가로 100cm, 세로 75cm 크기의 이 태극기는 유관순 열사가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고향인 충남 천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대한민국 국기선양회가 2000년 6월 3일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태극기는 제11·14·15대 국회의원이었던 손세일 전 의원이 기증한 것으로 국회방문자센터 1층 국회자료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 태극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글. 고영선 사진. 임진완

영국의 브렉시트 동향과 영향

브렉시트 교착상태에 빠진 영국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는 리스본조약 제50조에 따라 영국이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한 지 2년이 되는 2019년 3월 29일로 예정돼 있으나, 영국과 EU 양측은 현재까지 최종적인 탈퇴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영국 정부와 EU가 2018년 11월 25일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고 새해 1월 15일 찬성 202 대 반대 432의 큰 표차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영국 의회는 합의안 부결 이후 아무런 합의 없는 탈퇴(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하고, 합의안에 포함된 ‘안전장치(Backstop)¹⁾’에 대한 수정을 위한 추가협상을 요구한 반면, EU측은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브렉시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

협상의 최대 쟁점인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와 인접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의 부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오랜 유혈분쟁을 종식시켰던 1998년 ‘굿 프라이데이 협정’ 유지를 위해 합의했던 사항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EU측과 별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영국이 단일관세영역에 묶임으로써 자칫 EU에 영구적으로 잔류하는 것과 유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이에 대해 브렉시트 강경파와 북아일랜드민주연합당(DUP)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설치에 대해서도 아일랜드와 EU측이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대안을 찾기 힘든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극적인 타결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 노딜 브렉시트나 브렉시트 일정의 연기, 제2국민투표 등의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박세용 영국주재관

영국과 EU에 미치는 영향

2016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52%의 영국 국민은 주권의 자유

1) 전환기간 동안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영국은 EU와 단일관세영역을 구성하고, 북아일랜드는 상품분야 EU 단일시장에 남는다는 내용임.



로운 행사, 대외지향적인 국제관계, EU 분담금 절약, 이주자 통제 등을 위해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장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영국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무역과 투자 감소, 국내외 기업들의 이전계획 발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스코틀랜드의 독립 움직임, 북아일랜드 평화체제에 대한 우려, 조기총선·내각교체·탈당 등의 정치적 혼란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영국은 EU와 약 1년 9개월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을 두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브렉시트 재협상이 실패하고 브렉시트의 연기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 경우 그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중앙은행은 극단적인 노딜 브렉시트 시 2019년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에 비해 8% 하락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25% 하락하는 등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U의 입장 또한 절박하다.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유로화 가치가 달러화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역내 경제에 큰 악재가 예상된다. 또한 영국은 프랑스와 독일에 이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로서, EU의 재무 여건에도 큰 타격이 된다. 무엇보다 경기침체, 민족주의 등의 이유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의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EU를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EU의 존립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EU는 금융산업과 같이 유럽 내에서 영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을 역내에서 대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U는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기회에 대비하고 다른 회원국들의 동요와 이탈을 막기 위해 영국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영국이 탈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협상 전략을 취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에 주목할 때

현재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이 한-EU FTA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영-EU간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전환기간 동안 공백 없는 교역관계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서는 바로 영국에 대한 한-EU FTA의 적용이 중단됨에 따라 100개 이상의 영국 진출기업 및 국내외 유관 기업과 국민이 규제 차이로 인한 고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적으로 발생할 부정적 충격에 대비하고 한·영 FTA의 신속한 체결을 통해 무역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과 세계 경기 둔화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계 5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영국과의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될 여지가 크다. 과학, 바이오, 정보통신, 창조산업 등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영연방의 수장국이자 미국과 유럽을 잇는 통로로서 상업, 금융, 문화, 국제관계 등에서 높은 역량을 갖고 있는 영국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보다 대외지향적인 ‘글로벌 영국(Global Britain)’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관계를 만들어 나갈 파트너를 찾고 있다. 우리는 브렉시트가 미칠 단기적 영향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과의 미래관계에 주목할 시점에 와 있다. 📌

커뮤니케이션 혁명 이끄는 1인 미디어

1455년 독일의 작은 도시 마인츠. 이곳 공방에서 한 장인이 만들어낸 발명품과 2007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전시회에서 청바지 차림의 연사가 치켜올린 손안의 새 발명품. 반세기를 훌쩍 넘는 기간이 무색하리만치 마치 평행이론처럼 이 두 제품은 우리 인류의 삶을 바꾸었다.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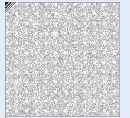
이들은 세계 최초라기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술들을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조합해 혁신을 일궈낸 결과물이다. 구텐베르크는 기존의 목판을 개선해 글자별로 배치가 자유로운 이동식 금속활자판을 개발해 포도주 생산에 쓰이던 스크루 프레스(screw press)와 유성 잉크를 결합, 종이에 압착하는 기술로 대량 인쇄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다. 잡스도 기존에 있던 세 가지 제품의 장점을 하나에 구현했다. “넓은 터치스크린을 가진 아이팟, 혁신적인 휴대전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터넷 통신기기.” 이로써 포스트 PC 시대, 스마트폰의 시대가 시작됐다.

평행이론 증명은 이어진다

중세의 유럽에서 책이란 것은 수도사들이 직접 보고 베껴 필사본이 대부분이었고 그 수도 극히 적었다. 특히 성경은 고가의 필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층과 소수 성직자의 전유물이었다. 고작 하루 수십 페이지 정도를 필사하던 성경의 제작을 3천600페이지로 늘린 것이 활판 인쇄술이었다. 이후 성경의 광범위한 확산은 종교개혁의 막을 올리며 개신교의 등장에까지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서적의 대량 보급은 소수 지식층에 국한돼있던 지식과 정보를 대중에 전파하며 서방의 사회문화적 혁명을 이끈다. 압축 인쇄기(Press)를 이르던 단어가 언론(Press)의 명칭이 되고, 매스미디어(mass media)의 기원이 되었으니 실로 이 발명은 문명의 전환이었다.



이희대 교수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편리한 휴대성, 직관적인 인터페이스(Interface), 동영상 촬영의 편의성, 데이터 품질의 향상... 2007년 첫 등장 이후 폭발적 대중화를 이룬 스마트폰의 성장을 이러한 기술적 유용함의 성과로만 설명할 수 없음을 오늘날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거리에서, 집에서, 맛집에서 삼각대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을 향해 이야기를 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42행 성서’의 기시감을 느낀다.

불과 5년 전만 떠올려도 미디어에 방영되는 방송·영상물의 제작은 언론·방송사 혹은 PD나 감독이 맡아야 하는 특화 영역이라는 데 의구심을 갖는 이는 드물었다. 2019년 현재는 어떤가. 내 손에 스마트폰과 구글 ID만 있다면 지금 곧 동영상 특종을 전 세계로 전달할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19억 명)이 로그인하고 있는 유튜브의 시청 시간 중 70% 이상이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바로 그 증거다¹⁾.

500여 년 전 포도주 압축기(Press)로 소수만의 전유물을 대중 누구나 향유할 수 있게 했던 그 변혁과 유사한 경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 전파의 주체가 소수에서 대중, 각 개인으로 전이되는 거스를 수 없는 문명의 전환을 다시 맞이하고 있다.

1인 미디어, 규제보다는 지원해야

기존 매스미디어 대비 제작비용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고품질을 선보이기 힘든 현실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느 방송사 채널보다 1인 미디어들이 더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은 이 전환을 증명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1인 시청환경에서 이용자들은 만듦새 자체보다는 크리에이터 개인이 전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선호 취향에 맞는지 그 동질감과 공감에 더 의미를 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현상엔 또 다른 배경도 살펴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간을 대신하는 기계(machine)의 확장으로 생활 곳곳에 비대면(非對面)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인 미디어 인기 채널들 대부분이 유사 면대면(面對面, Face-to-Face) 커뮤니케이션 형태다. 먹방, 제품 리뷰, 정치 논평... 장르와 상관없이 스마트폰 속 작은 화면의 크리에이터가 자신을 바라보며 대화하듯 이야기를 하는 방식에 이용자는 더 반응한다.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다시 찾아오는 구독자가 되고, 친밀한 팬이 된다.

1인 미디어는 단순히 스마트기기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행위 이상의 소셜 플랫폼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1인 미디어는 이러한 인간의 내적 딜레마를 기술적으로 더 섬세하게 해소해줄 수 있는 진화된 도구일 수 있다. 공간적 제한과 격식의 엄격성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동영상을 통해 유사 대화라는 방식으로 상호 소통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그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전 인류에 더욱 익숙해질 이 소통의 방식의 진화를 다양한 콘텐츠의 실험을 통해 미리 개척하고 있는 1인 미디어의 크리에이터들을 이 새로운 미디어 혁명을 이끌 최전방의 프론티어로 인식하고, 규제와 제도보다는 장려와 육성으로 우리 사회가 체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할 이유다. 🏠

1) <https://www.youtube.com/intl/ko/yt/about/press/>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2018.04.17, 일부개정)

홈쇼핑업체 콜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환불을 거절했다가 심한 욕설을 들었다. 매일 고객들로부터 폭언을 들어도 한 마디도 못한 채 참다 보니 전화 벨이 울리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감정노동’이 늘어나면서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고객응대근로자(일명 ‘감정노동자’)는 약 7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회는 2018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정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찾아 지난해 10월 18일 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 들어봤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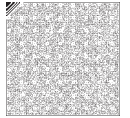
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감정노동자 및 관리자 교육, 감정노동자 관련 심리상담,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이정훈 소장은 “현장에 가보면 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을 부분적으로나마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산 1, 3호터널 요금소 앞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요금징수원에게) 폭언, 욕설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밑에 있는 편의점 계산대 앞에도, 마트 계산대 앞에서도 비슷한 문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완곡하게 고객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법이 시행된 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지요.”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의 경우,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의 폭언으로 인해 업무중단 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고객응대근로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소장은 “일부 사업장에서는 콜센터 직원들에게는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아무리 심한 욕이나 성희롱 발언을 들어도 콜센터 직원들이 절대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전화를 먼저 끊게 되면 ‘제대로 응대 못한 경우’로 집계되고, 이 횟수는 패널티가 되어 인사고과나 재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콜센터 등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에게 폭언은 물론이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고객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성희롱 발언의 경우 한 번 만에, 욕설이나 폭언의 경우 두 번 경고를 한 뒤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합니다. 심한 욕을 한 고객에게는 1차 경고의 의미로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이 나가기도 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이 소장은 “법 시행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법 시행 직전 집중적으로 현수막, 스티커, 포스터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배포했

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를 안내하는 동영상도 제작했다. 또, ‘감정노동자 존중문화’ 캠페인(#andYOU)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콜센터, 병원, 마트 등 감정노동 고위험 업종 2천 곳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실시했다.

“예전에는 욕설이나 성희롱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정적 상해’도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백화점, 마트 등 민간기업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자체 매뉴얼을 갖추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첫발을 뗐지만 하청·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백화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에 불만을 품은 고객이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폭언을 퍼부어 물의를 빚었던 적이 있다. 이정훈 소장은 “당시 직원이 백화점 소속이 아닌 매장 소속 직원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하청·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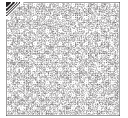
글. 박민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8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
2018년 12월 7일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NEWS

2019 MARCH

문화상 국회의장, 2019 평창평화포럼 참석



문화상 국회의장은 2월 9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2월 27일에 예정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화상 국회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다. 2017년 연말까지 ‘한반도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국제정세는 긴박했으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면서 “실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상 국회의장은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지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과가 아니다”라며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수많은 북미회담에서의 협상과 합의, 6자회담을 이어갔던 미·일·중·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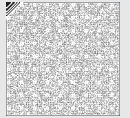
끝으로 문화상 국회의장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보내주는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포럼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강원도, 평창군, 코이카가 주최했으며 ‘평창에서 시작하는 세계평화 (Agenda for Peace, from PyeongChang to the World)’를 주제로 진행됐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 공간문화개선 자문위원회 출범



문화상 국회의장은 2월 19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공간문화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국회 내·외부 공간



구조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를 비롯해 건축, 조경, 환경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원혜영·정병국·주호영·이정현·권미혁 의원 및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식에 앞서 제1차 회의를 열어 김원 광장 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8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시상



문희상 국회의장은 2월 28일 국회의사당에서 ‘2018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시상했다.

국회의장은 입법정책 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매년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들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은 65개 연구단체가 제출한 2018년도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1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위원장 한무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에서 평가해 추천하고,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에서 최종적

으로 확정했다.

올해의 우수 연구단체는 작년 19개 단체에서 6개 단체가 줄어든 13개 단체가 선정됐는데, 이는 정책연구보고서 부실 작성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음을 감안해 연구성과를 좀 더 엄격히 평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원연구단체는 6개 분야 총 66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정책연구보고서 제출 88건, 법률안 발의 706건, 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340회, 간담회 등 개최 170회 및 현지조사활동 21회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총13개단체)

분 야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통일·외교·안보 (2)	미래안보포럼	김종로 의원
	통일을넘어유라시아로	노웅래 의원 홍문표 의원
정치·행정 (2)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	김학용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 이정미 의원
재정·경제 (3)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정동영 의원
	경제재정연구포럼	김광림 의원 장병완 의원
	자유민주포럼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연주 의원 김영우 의원
교육·과학기술·환경 (2)	국회미래일자리와교육포럼	신용현 의원
	국회제4차산업혁명포럼	송희경 의원 박경미 의원 신용현 의원
복지·노동·인권 (3)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춘숙 의원 권미혁 의원 김삼화 의원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	강창일 의원 인재근 의원
	인구정책과생활정치를위한 의원모임	김상희 의원 윤호중 의원
문화·관광 (1)	언론공정성실험모임	김성수 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 쿠웨이트 주한대사 면담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2월 12일 국회부의장실에서 방한한 쿠웨이트 국회의원 일행과 주한 쿠웨이트 알 아와디 대사를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쿠웨이트에 건설 중인 48km의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연륙교 사업 등과 각종 석유, 항만, 담수플랜트, 교량 등 인프라 시설, 스마트신도시 건설에 앞으로도 기술력과 경험을 두루 갖춘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쿠웨이트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휴가급여 실질화 법안 대표발의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출산전후 등 휴가급여를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기존 ‘통상임금’보다 더 많이 받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기존의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현행법은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는 그 휴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제외돼 있으므로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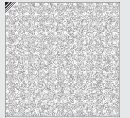
이어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정안은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신·출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회도서관,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 ‘아르고스’·‘챗봇’ 서비스 등 오픈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 ‘아르고스(Argos)’는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이 보유한 입법·정책·학술자료 등 양질의 데이터와 의정 지원에 필요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의 신개념 의회 지원서비스다. ‘아르고스

(Argos)’는 국회 내·외부 자료를 분석해 현안과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분석 데이터를 언급량 추이, 이슈 히스토리, 연관어 맵, 공무원 감성어 등으로 시각화해 제공한다. 2월 20일부터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국회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도서관 이용자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비스 국회도서관 챗봇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금주의 서평’, ‘휴먼전문가 서평’, ‘열린 서평’ 중 101편을 엄선한 전문가 서평 모음집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1권의 책’ 도서관 사회도 열었다.

국회에산정책처 ‘산업동향 & 이슈(제16호)’ 발간

국회에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최근 ‘산업동향 & 이슈(제16호)’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매월 발간되는 동향지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무역·산업여신 동향이다. 제조업 생산은 11월 중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했고, 총수출과 11대 산업의 수출은 12월 중 전년동월대비 각각 -1.2%, -1.0% 감소했다. 산업여신은 2018년 3분기 중 규모가 큰 서비스업 등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한 1천107조 원이다.

다음은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국민경제에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된 한편, 가계부문에서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되기 시작했다.

1991~2016년 기간 중 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소득분배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산업구조 서비스화와 자영업 취업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분배 불균형이 증가하고,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하면 소득불균형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분배 수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전반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서비스업 내 노동생산성 격차 해소를 통한 임금 불평등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나라 연금상품의 특징과 시사점 제시다. 연금상품은 노후대비를 위한 가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나, 최근 신규 가입 증가가 둔화되거나 유지율이 낮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금상품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비경제활동인구와 저소득자의 낮은 가입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낮은 수익률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금제도의 보완, 납입유예(중지), 중도인출, 담보대출 등에 대한 가입자 교육 강화 및 비교공시 확대, 가입자별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북아 정세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기획 간담회 연속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9년 동북아정세변화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과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5회의 기획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기획 간담회는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EU, 미국 등 5개 지역전문가를 순차적으로 초청해, 각 지역의 2019년 외교정책방향과 한국과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2월 26일 현재 중국·일본·북한 편 기획 간담회가 완료됐다.

‘기획간담회 1-중국’편에는 정재홍 박사(세종연구원), 유동원 교수(국방대), 김지운 교수(충남대), 김예경 입법조사관(외교안보팀)이, ‘기획간담회 2-일본’ 편에는 손열 교수(연세대), 이면우 부소장(세종연구소), 박영준 교수(국방대), 박명희 입법조사관(외교안보팀), ‘기획 간담회 3-북한’ 편에는 박형중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이호령 선임연구위원(국방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통일연구원), 이승열 입법조사관(외교안보팀)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이후 ‘기획 간담회 4-EU·러시아’ 편에는 고상두 교수(연세대), 김남국 교수(고려대), 김성진 교수(덕성여대), 심성은 입법조사관(외교안보팀)이, ‘기획 간담회 5-미국’ 편에는 전재성 교수(서울대), 우정엽 연구위원(세종연구소), 마상윤 외교전략기획관(외교부), 김도희 입법조사관(외교안보팀)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기획 간담회의 발표·토론 자료는 5회 간담회 종료 후 ‘2019년도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방향 및 국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국회미래연구원,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 발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과 2019년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만 15세 이상~65



세 이하 전국 남녀 3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이용해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은 미래세대의 불안감으로 인해 과학기술, 경제 정책 등에서 변화에 대한 소극적 경향을 보였으나, 다원성과 포용성 등에 대해서는 지지 경향을 보였다.

세대별로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던 분야는 ‘이민정책’으로 나타났는데, 20대는 이민 억제제, 50대는 이민 확대를 선호했다. ‘가족제도’에서도 세대별 의견 차이가 나타났는데, 10대와 20대는 혼인, 혈연이 아닌 생활공동체도 가족으로 인정하기를 원했고, 60대는 현재의 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했다.

한편, 과학기술에 대한 전망은 대부분 긍정적이거나, 인공지능의 노동 대체에 대해서는 우려의 의견(64%)이 많았고, 유전자 선택 및 조작 등 생명기술의 발전에도 엄격한 규제가 필요(67.9%)한 것으로 응답했다. 기후변화와 환경 부문은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 전환 비용에 대한 부담 의향 질문에는 33.1%만 동의했다.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는 지난 2월 2일 ‘SBS 8시 뉴스’를 비롯해 2월 18일 ‘세계일보’와 ‘한겨레’ 등에 보도됐다.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기초를 세운 손정도

1919년 4월 10일 손정도는 29명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의장 이동녕과 함께 부의장에 선출됐다. 손정도는 부의장으로 임시의정원의 기초를 마련했다. 신익희·조소앙·이광수와 함께 임시의정원법을 기초한 것이다. 임시의정원이 조직과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임시의정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임시의정원법은 1919년 4월 25일 제정됐다. 임시의정원법에 의해 각 지역별로 의원이 선출됐고, 의원들이 새롭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 조직을 갖췄다. 이때 의장으로 선출된 인물이 손정도(孫貞道)였다.

손정도는 평남 강서 출신으로 기독교 목사였다. 평양에서 목사로 활동하던 그는 1919년 1월 상하이로 망명해 신한청년당에서 활동했다. 신한청년당은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한 것과 더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데 실무역할을 수행한 단체였다. 상하이로 많은 인사들이 모여들자 손정도는 이들과 함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추진했다.



임시의정원 제6회 기념 사진(1919. 9. 17). 제6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세 임시정부의 통합을 이뤘다.



4차 회의에서 제2대 의장에 선출돼

제4차 회의가 개최되면서 초대 의장이었던 이동녕이 사퇴했고, 의정원법에 의해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했다. 부의장이었던 손정도가 의장에 선출됐다. 제2대 의장이었다. 부의장에는 신규식(申圭植)이 선출됐다.

손정도는 의장으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는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열린 제4차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당시 임시정부는 수립만 된 상태였다. 국무위원 중 상하이에 있던 인물은 법무총장 이시영(李始榮) 뿐이었고, 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을 비롯해 각원들 대부분은 미국이나 연해주에 있었다. 국무총리는 미국에 있어 취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회의에서 국무총리 대리인 이동녕을 선출해, 정부를 이끌도록 했다.

재정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손정도는 의원들에게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원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고, 의견이 모아졌다. 우선 상하이에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의연금금을 모집한다는 것, 정부로 하여금 인구세를 징수하고 공채를 발행토록 하는 것이었다. 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정부는 6월 15일 ‘임시징세령’과 ‘인구세시행세칙’을, 이어 ‘국채통칙’과 ‘독립공채발행조례’도 제정, 공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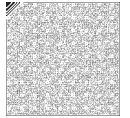
의정원의 조직과 활동기반도 마련했다. 이는 제5차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5차 회의는 7월 7일부터 19일까지 열렸다. 여기서 의정원법에 의해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신채호(申采浩)가 맡았다. 상임위원회는 법제·

내무·외무·재무·군무·교통·예산결산·청원·징계 등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국제연맹에 한국독립문제를 제출하기 위해 국제연맹회제출안건작성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했다. 이후 의정원은 위원회를 기반으로 운영됐다.

의장으로 당면한 문제가 또 있었다. 세 곳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를 통합시키는 문제였다. 3·1독립선언 직후 세 곳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3월 17일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가,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월 23일 국내에서 한성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세 임시정부는 수립된 지역도 달랐고, 인적 기반도 같지 않았다. 그렇다고 세 임시정부가 모두 민족 대표기구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하나로 통합시켜야 했다.

세 임시정부의 통합문제는 안창호가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안창호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내무총장으로 선출됐다는 통보를 받은 그는 상하이로 부임했고, 6월 28일 내무총장에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미국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대리도 맡았다. 안창호는 7월 8일 임시의정원 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는 한편, 세 임시정부의 통합에 나섰다.

안창호는 우선 의정원의 동의를 얻고자 했다. 의정원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세 임시정부를 통합해야 하는 당위성과 방안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방안은 이승만이 미국에서 한성정부의 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과 한성정부가 국내에서 조직됐다는 것을 이유로, 통합정부는 대통령제로 할 것과 상하이에서 수



립된 정부를 희생하고 한성정부를 승인하자고 했다.

안창호와 함께 임시정부 통합 추진

손정도는 안창호의 방안에 동의하고, 안창호와 함께 통합을 추진해나갔다. 추진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의정원에서 대통령제의 헌법과 임시정부의 개조작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국민의회 측과 협상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대한국민의회 측과의 협상은 안창호가 맡았다. 안창호는 협상을 위해 내무차장 현순(玄楯)을 연해주로 보냈다.

협상은 타결됐다. 핵심은 상하이와 연해주에서 수립한 임시정부는 모두 없애고, 국내에서 수립한 한성정부를 계승하는 형식으로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통합정부의 위치는 상하이에 둘 것, 정부의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할 것, 상하이와 연해주의 각원은 모두 사퇴하고 한성정부에서 선출한 각원으로 하여금 통합정부의 각원을 맡도록 할 것 등에 합의를 이뤘다.

헌법 개정과 임시정부 개조작업은 의정원을 통해 이뤄졌다. 헌법 개정은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를 대통령으로 고쳐 대통령중심제로 하고, 정부의 조직은 한성정부의 조직안대로 한다는 정부개조안이 마련됐다. 손정도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8월 18일 임시의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헌법 개정안과 정부개조안에 대한 토의를 시작해, 9월 6일 이를 통과시켰다.

개정 헌법과 정부개조안이 통과되면서, 이에 의해 통합정부가 성립됐다. 의정원은 9월 8일 회의에서 개

정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였던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정부의 각원들은 한성정부의 각원들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했으므로, 한성정부의 각원들이 그대로 선임됐다.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하는 형식을 취했고, 9월 11일 대통령 이승만과 국무총리 이동휘(李東輝)를 중심으로 한 통합정부가 성립됐다.



손정도

통합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해주·상하이·국내에서 수립된 세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을 이루면서, 명실공히 민족의 대표기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세 임시정부가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내무총장 안창호와 의정원 의장 손정도의 역할이 있었다. 이들이 서로 협력해 통합정부를 이뤄낸 것이다.

손정도는 1921년 2월까지 제2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기초를 세우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임시정부에서 교통총장에 임명되기도 했지만, 1922년 서간도 지린(吉林)으로 옮겨갔다. 지린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하며 독립운동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1931년 액목현(額穆縣)에서 위장병으로 서거했다. 🏠

글·사진. 한시준 교수(단국대 사학과 동양학연구원장)

나쁜 참새는 없다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 농촌을 순시하다가 쌀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참새들 때문에 걱정이라는 말을 듣고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들을 모두 잡아서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참새는 없어졌는데 문제는 갑자기 메뚜기들이 급증하는 바람에(메뚜기의 천적인 참새가 줄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농부들이 더 힘들어졌다.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경제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유독 더 어려운 건 복잡한 숫자나 통계나 용어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상식적인 행동이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벌이는 일들 중에는 이런 참새 없애기 같은 어리석은 시도들이 꽤 있다. 대표적인 게 ‘이자제한법’이다.

고금리 대부업자가 존재하는 이유

‘이자제한법’은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연 24%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인데, 이 기준은 3년 전만 해도 34.9%였다.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 법은 “왜 서민들은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것일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했고 “서민들에게 높은 금리를 받는 나쁜 대부업자들 때문”이라고 결론내린 법이다. 그래서 그 대부업자들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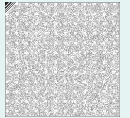
그러나 어떤 서민에게 연 100%가 넘는 끔찍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악덕업자가 존재하는 이유

는 그 악덕업자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서민에게 연 100% 이하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 서민은 연 100%의 이자를 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심지어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부업체를 찾는 많은 서민들은 정부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울 만큼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차도 서민들을 위해 언제든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을 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불쌍한 서민들의 신용도가 생각보다 낮기 때문이다. 서민 2명에게 각각 돈을 500만 원씩 빌려줬다가 둘 중 한 명이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면 나머지 한 명이 1천만 원을 갚아야 그 대부업자는 겨우 본전이 된다. 연 이자율 100%는 그 숫자만 보면 엄청나고 끔찍하지만 돈을 못 갚을 확률이 2분의 1인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정당한’ 이자율이다. 돈을 못 갚을 확률이 2분의 1이나 되는 이유는 그 서민들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 100%의 이자를 부과하고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자는 그 서민에게는 유일한 탈출구다. 서민을 돕는 것을 선으로, 서민을 힘들게 하는 걸 악으로 규정한다면 그 대부업자는 그나마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다. 연 100%의 이자율이라는 끔찍한 금리가 존재하게 만든 범인은 ‘그 나쁜 대부업자’가 아니라 어쩌면 그를 제외한 우리 모두다. 우리들 가운데 누



구 하나라도 그 서민에게 연 99%의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면 그 끔찍한 이자는 존재하기 어려울 텐데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들은 서민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때돈을 벌고 있는가하면 그렇지도 않다. 만약 그 사업이 때돈을 번다면, 그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박리다매형 대부업자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서민들이 높은 금리에 계속 시달리는 이유는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회수해서 대부업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적절한 금리가 이자제한법이 권고하는 연 2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방증이다.

이자제한법을 옹호하는 명분 가운데 귀기울일만한 논리가 있긴 하다. 연 25% 이상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가난하고 신용도 낮은 서민들에게는 대출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니 그들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돈을 공짜로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주장의 선한 의도를 십분 이해하더라도 그래야 한다면 ‘이자제한법’을 만들 게 아니라 얼른 그런 복지제도를 만들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25% 이상의 고금리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이자제한법’이 서민의 유일한 탈출구 봉쇄한 셈

우리가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이자제한법’은 서민들이 급히 돈이 필요할 때 거리로 나가서 강도짓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탈출구를 봉쇄해버렸다. 그리고 중산층들이 급전을 쓸 때 지불하는 이자율을 낮추는 부수효과만 거두고 있다.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이제는 서민들이 아닌 중산

층들을 겨냥해 대부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을 지키려면 가난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

덕분에 중산층에게 돈 좀 빌려가라고 권하는 업체들이 과거에는 신용카드사나 저축은행 정도였는데 거기에 대부업체까지 가세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자가 내려간다. 아무도 “우량 직장인 신용대출 이자 제한법”을 만들지 않았지만 시장의 변화가 그들의 이자를 내린 것이다.

서민들이 높은 금리에 시달리는 것은 서민들이 가난하기 때문이고 집값이 터무니없이 오르는 이유는 거주할만한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많은 이유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좀 더 파고들면 서민들이 가난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집이 부족한 이유는 필요한 곳에 집을 많이 공급하다보면 생기는 부작용(외곽지역 집값의 하락으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을 우리가 피하고 있기 때문이고,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고용하는 창업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그걸 우리는 손쉽게 대부업자 때문, 다주택자 때문, 약덕 경영주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설명이 명쾌해보이고 서민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포장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은 인기를 얻는다. 그리고 그 정책의 결과로 대부업자가 사라지고 다주택자가 줄어들고 경영주들이 없어진다. 참새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진우(MBC 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극한국회’에서 기자들이 살아남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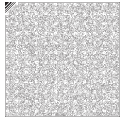
부애리 기자
아시아경제 정치부

최근 천만 관객을 돌파한 ‘극한직업’이란 영화를 봤다. 영화에서 마약반 형사들은 팀을 의지하며 극한 상황을 극복해나간다. 이 영화의 마약반 구성원을 보면서 국회 ‘꾸미’를 떠올렸다. 국회에서 출입기자로 지낸 지 어느새 1년이 훌쩍 넘었다. 국회의원 얼굴과 이름도 제대로 구분 못 해서 당황하던 초짜였던 내게 ‘꾸미’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기자들이 국회에 처음 출입하게 되면 “우선 꾸미부터 구하라”는 조언을 반드시 어디선가는 듣게 된다. ‘꾸미’라는 용어를 쉽게 설명하자면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모여 있는 ‘기자 그룹’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타사와 속보, 단독 경쟁을 해야 하는 기자들에게 경쟁

자와 공존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국회 기자들에게 꾸미는 정신없고 삭막한 국회 취재 환경에서 ‘필수템’이다.

기자들의 워딩 구하기 전쟁

2017년 대선 직후, 더불어민주당 말진으로 국회에 첫 출입하게 된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당시 추미에 대표는 대선 직후 첫 오전회의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집권여당에 출입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악수를 건넸다. 이날 이후 여당 말진의 고통(?)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여당 출입 기자들은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정책조정회의를 비롯해 각종 당정협의 등 극한 일정을 쟁겨야 한다. 기자들은 당 지도부의 발언을 워딩(받아쓰기)해 그날그날 기사를 쏟아낸다. 이게 말이 쉽지 모든 지도부의 발언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받아치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서 꾸미의 1차 역할이 빛을 발한다. 기자들은 꾸미 단톡방에 워딩을 올리며 서로의 받아쓰기를 크로스체크한다. 타자가 느린 기자들은 꾸미에 끊임없이 워딩을 구걸하는 웃기는 상황이 가끔 벌어지기도 한다. 또 국회 특성상 몸은 1개인데 가야 하는 현장은 2~3개가 되는 상황이 생길 때나 미처 못 챙긴 현장이 생길 때 꾸미는 정말 유용하다. 특히 정기국회나 임시국회를 앞두고는 여야 원내대표들은 협상을 위해 수시로 비공개 회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기자들은 꾸미에 회동 일정을 공유하거나, 자신이 탄 지도부의 멘트 등을 올리는데 이를 서로 ‘풀 해준다’라고 표현한다. 국회에서 기자들이 서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다. “풀 줘...” “선배, 풀 해줘요!”

꾸미에도 콘셉트가 있다? ‘결그룹 꾸미’의 탄생

꾸미를 구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꾸미가 살아남기도 쉽지 않다. 기자들은 워딩과 정보 공유 외에도 밥 약속을 잡는 데 꾸미를 활용한다. 바쁜 일정의 국회의원이나 기자들을 일일이 한 명씩 만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모여 있는 꾸미를 활용해 서로 소통하는 셈이다. 물론 꾸미가 있다고 해서 의원과의 약속이 잘 잡히는 것이 아니다. 당 출입기자들이 수백 명에 달하고, 기자들의 꾸미도 정말 많다. 취재원의 기억에 잘 남기 위해 각 꾸미마다 콘셉트를 잡는 경우도 있는데 남기자 꾸미, 여기자 꾸미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국회에 처음 왔을 때 꾸미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비슷한 연차, 비슷한 시기에 출입하게 된 젊은 여기자들끼리 모여 꾸미를 만들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기자 6명이 모여 있는

꾸미인데 한 민주당의 젊은 의원이 오찬을 하다가 우리를 향해 “그러면 결그룹 꾸미야?”라고 농담을 건넸는데 그 이후 우리에게 ‘결그룹 꾸미’라는 콘셉트가 생겼다. 우리에게 결그룹이라는 이미지가 붙는 것에 대해 욕할 사람은 다 욕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한다. 타사 선배에게 주워듣기로는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서도 우리 꾸미가 이 별명으로 제법 알려져 있다고 한다.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그 어디쯤인 ‘꾸미 문화’

힘든 일을 같이 겪으면 친해진다는 말이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꾸미끼리 모여서 매일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경우가 많다. 날씨가 유난히 화창했던 날 꾸미원들과 함께 국회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하면서 놀았던 추억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또 단톡방으로 일하는 국회 시스템상 꾸미 단톡방에서도 농담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서로의 고통을 해소한다. 기사에는 쓸 수 없는 다소 민감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도 있었다. 기자들끼리의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회 단톡방 성희롱 논란’이 벌어진 적도 있다. 많은 이들이 모여 있는 국회 특성상 이러한 부분은 누구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국회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 만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 이럴 때마다 의지가 되는 것이 꾸미다.

국회 꾸미를 떠올릴 때마다 ‘품앗이’ 개념이 떠오른다. 품앗이는 일을 하는 ‘품’과 교환한다는 뜻의 ‘앗이’가 결합된 말로,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이다. 한국의 공동 노동 중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됐다고 한다. 국회 기자들의 품앗이 ‘꾸미 문화’가 좋은 방향으로 오래도록 계속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

‘라이프로그’로 만드는 맞춤형 개인비서

학창시절 3월이 되면 방학이 끝나는 것도 아쉽지만, 밀린 방학 숙제를 허겁지겁 해치우는 것도 골칫거리였던 기억이 난다. 방학 숙제 중에서도 가장 하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매일 써야하는 일기였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꾸준히 일기를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대신 요즘에는 다른 여러 수단으로 하루하루의 기록을 남긴다. SNS에 올리는 음식 사진, 블로그에 남기는 여행 후기 같은 기록이 일기를 대신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조차도 귀찮다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자동으로 활동 기록을 저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남긴 개인의 생활 기록을 ‘라이프로그’라고 한다. 생활을 뜻하는 ‘Life’와 기록을 뜻하는 ‘Log’를 합쳐 만든 단어다.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쓴 일기가 나중에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하듯이 개인의 라이프로그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미래에는 라이프로그를 이용해 어떤 일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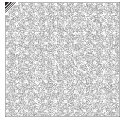
나를 가장 잘 아는 비서

일기가 대개 과거를 추억하는 데 쓰이는 데 비해 라이프로그는 생활에 편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날의 일상과 감정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행동 패턴과 건강 상태 같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분석하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과 결합한다면 알아서 일정을 관리하고, 기분에 맞춰 듣고 싶은 음악을 틀어주며, 음식과 쇼핑 목록 등을 추천해주는 맞춤형 개인비서가 생길 것이다. 자기 자신보다 더 나은 비서가 어디 있겠는가?

현재 가장 대중화된 활용처는 건강관리다. 과거에 건강에 신경 쓰던 중년이 차고 다니던 만보기의 발전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센서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만 있어도 가능한 일이다. 건강관리 앱으로 하루에 몇 보를 걸었는지, 몇 시간 동안 활동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매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나이키의 퓨얼밴드나 핏빗, 미밴드와 같은 스마트밴드를 따로 이용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도 한다. 심박수를 측정해 운동 효과를 알려주고, 잠잘 때 착용하면 수면의 질이 어땠는지를





알려준다. 단순히 측정과 기록만 하면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갖췄다. 게임과 같은 형식을 도입해 목표를 설정해 달성하도록 만들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도전하게 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식이다.

모든 일상의 기록과 사생활 침해

라이프로그에 쓰일 웨어러블 장비와 스마트폰 앱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기술은 스마트글래스다. 구글의 구글 글래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대표적으로,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스마트 디바이스라 할 수 있다. 안경처럼 착용하면 눈앞에 원하는 정보를 띄워준다. 예를 들어, 스마트글래스를 쓰고 축구 경기를 보면 실시간으로 눈앞에 선수에 관한 정보나 경기 분석 내용을 띄우는 식이다.

이런 장치를 쓰면 라이프로그를 기록하는 일이 매우 편리해진다. 눈앞의 상황을 상시 촬영할 수 있고, 오가는 대화도 모두 녹음할 수 있다. 지금도 굳이 하자면 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스마트폰을 꺼내 작동시키기는 번거롭다. 더 나아가 SF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몸 안에 이식할 수 있는 장치가 나온다면 말 그대로 일상생활 전체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빌 게이츠도 “우리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봐, 김 대리. 이거 왜 내가 지시한 대로 안 했어? 일을 멋대로 하면 어쩌자는 거야?”

“부장님이 어제 지시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재생해볼까요?”

“...됐어.”

그런 세상이 온다면 기억의 오류로 생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다. 물론 감정의 양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감정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

자면, 영상과 소리 외에 그 당시의 감정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체에 부착하는 센서를 이용해 피부 온도, 피부 전기전도도, 움직임 등을 측정한다. 이런 생리적인 반응을 보고 흥분이나 불안감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구별한다.

이런 방식으로 모인 수많은 사람의 데이터는 여러 기업에서 탐내는 정보가 된다. 라이프로그라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의 취향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면 개인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로서는 취향과 필요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고, 기업으로서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한편 라이프로그는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먼저 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과 원치 않게 다른 사람의 라이프로그에 담기게 되면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를 떠올릴 수 있다. 사생활 기록이 유출되었을 때 생기는 피해도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평생의 기록이 영원히 인터넷에 남는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할지도 모른다.

영국의 SF드라마 ‘블랙 미러’의 한 에피소드는 이와 같은 미래를 그리고 있다. 개개인의 생활이 모조리 기록되는 세상에서는 기업이 취업지망자의 기억을 살펴보기도 하고 남의 기억을 노리는 변태에 의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미래를 보면 과거의 기억을 어렵풋한 추억으로만 간직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 일상생활을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기는 기술이 더욱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줄 것도 분명하다. 다만 새로운 기술은 대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술 개발과 함께 사회적인 논의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 

글. 고호관(과학칼럼니스트)

수덕사 대웅전과 선(禪)의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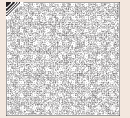
수덕사 대웅전

선종(禪宗)의 근본 도량, 수덕사(修德寺). 충남 예산군 수덕사 가는 길은 늘 선(禪)을 생각하게 한다. 선은 무엇이고, 선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수덕사 어디에서 그 선을 만날 수 있는가. 흥미롭게도 그 답은 바로 수덕사 대웅전(大雄殿)에 있다.

국보 49호 수덕사 대웅전. 고려 말 충렬왕 때인 1308년 건립된 대웅전은 한국 최고(最古) 건축물 가운데 하나다. 수덕사 대웅전 앞에 서면, 어떤 설명도 필요 없다. 가장 단순한 기와집 한 채가 우뚝 서 있는 형국이다. 간결함과 단순함의 미학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체 무엇이 이 건물을 이토록 단순 명쾌하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다름 아닌 맞배지붕이다. 맞배지붕은 지붕이 건축물의 좌우면에는 없고 앞뒷면으로만 맞붙어 있는 형태의 지붕을 말한다. 옆에서 보면 지붕의 선이 사람 인(人)자 모양을 하고 있다. 우리 전통 건축의 기와지붕은 모양에 따라 크게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나뉜다. 맞배지붕은 그 가운데 가장 단순한 형식이다.

수덕사 대웅전은 앞면 3칸, 옆면 4칸으로 돼 있다. 대웅전의 맞배지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너무 큰 옷을



입은 사람 혹은 헐렁한 모자를 쓴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기에 소박함이 느껴진다. 그 소박함은 간결함과 장중함으로 이어진다. 중간을 약간 배불리 나 오게 만든 건물의 배흘림기둥은 이 묵직한 지붕을 튼실하게 받쳐준다. 믿음직스럽다.

대웅전 맞배지붕의 매력과 미학은 옆면에서 더 잘 드러난다. 지붕은 옆면에서 보아도 역시 육중하고 견고하다. 지붕 밑으로는 수평 부재인 보가 가로놓여 있다. 그리고 지붕과 보가 연결되는 지점에 지붕의 하중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부재가 단아하게 짜맞춰져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장식을 배제하고 있다. 간결 명료하다는 말이다. 사람 인(人)자 모양의 지붕선은 거기 어떠한 장식이나 꾸밈도 없다. 군더더기 없이 그저 최소한의 지붕선만 있을 뿐이다. 최소한이기에 오히려 더 힘이 넘친다. 기둥과 보의 나무 부재들은 가로 세로로 놓이면서 대웅전 옆쪽 벽면의 공간을 멋지게 분할한다.

옆면 아래쪽에서 처마를 올려다본다. 좌우 옆면 벽체 바깥으로 다소 길게 뻗어나온 지붕의 처마. 지붕을 구성하는 목재들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질서정연하다. 보와 도리들이 나란히 배치된 서까래와 직각으로 교차하면서 멋진 디자인을 연출한다. 이에 힘입어 대웅전 옆면 전체에 조용하지만 경쾌한 리듬감이 넘쳐난다. 그 위로 기와지붕의 완만하고 부드러운 곡선이 전체를 감싸고 있다.

수덕사 대웅전의 특징은 경북 영주시 부석사 무량수전(浮石寺 無量壽殿, 국보 18호, 고려 1376년)과 비교해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수덕사 대웅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목조 건축물이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정교하면서 세련된 곡선의 미학을 보여준다. 사뭇히 고개를 치켜들고 마치 출렁이는 듯한 처마 곡선이 보는 이를 매료시킨다.

그러나 수덕사 대웅전은 이와 사뭇 다르다. 곡선이 아닌, 장중하면서도 힘찬 직선의 미학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량수전이 여성적이라면, 대웅전은 남성적이다.

수덕사 대웅전의 맞배지붕은 불필요한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다 털어냈다. 쓸데없는 욕망과 번잡함을 멀리 날려 보내고 최후에 남은 뼈대만을 건축으로 구현했다. 그렇기에 처음 보면 다소 둔탁하고 밋밋하지만 보면 볼수록 깊이가 느껴지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것이 선(禪)의 요체다. 기하학적 구성과 조용하지만 경쾌한 리듬감 그리고 견실한 힘. 선(禪)의 사찰 수덕사에 걸맞게 침묵하면서도 심오한 깊이를 전해주는 대웅전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대웅전의 진정한 미학이다.

맞배지붕의 매력을 보여주는 또다른 옛 건축물로는 강원 강릉시의 국보 51호 임영관 삼문(臨瀛館 三門)과 전남 강진군의 국보 13호 무위사 극락전(無爲寺 極樂殿, 1430년)을 들 수 있다. 임영관 삼문은 고려시대에 지은 강릉 객사(客舍)의 정문이다. 고려 때엔 이 객사를 임영관이라 불렀다고 한다. 고려 초 창건 이후 몇 차례의 수리가 있었고 일제강점기에 객사 건물들이 헐리고 이 정문만 남게 됐다. 정문 안쪽에 있는 현재의 임영관 건물



수덕사 대웅전의 맞배지붕



수덕사 일주문 현판

들은 2006년 복원된 것이다. 임영관 삼문은 우리나라 옛 건축물 가운데 배흘림이 가장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답다. 수덕사 대웅전처럼 임영관 삼문의 배흘림기둥은 육중한 맞배지붕을 잘 받쳐주기에 특히 인상적이다. 조선 세종 때인 1430년에 창건된 무위사 극락전 역시 담백과 절제의 미학, 맞배지붕의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고 있다. 맞배지붕에 어울리게 사찰의 분위기 또한 검박하고 명징하다. 수덕사 대웅전처럼 무위사 극락전의 맞배지붕은 우직하고, 그 우직함은 보면 볼수록 그윽하다.

수덕사 대웅전 가는 길, 이왕 걸음을 땀으니 대웅전 말고 또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몇 개 있다. 우선, 일주문에 붙어 있는 ‘德崇山 修德寺’라는 현판이다. 이 글씨를 쓴 사람은 소전 손재형(素筌 孫在馨, 1903~1981년)이다. 그는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가 그린 ‘세한도(歲寒圖)’(국보 180호)를 1944년 일본에서 찾아온 유명한 컬렉터다. 손재형은 1920년대 초 추사의 글씨 ‘竹爐之室(죽로지실)’을 당시 집 한 채 값에 육박하는 1천 원에 사들였다. 또한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金剛

全圖)’(국보 217호)와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국보 216호), 단원 김홍도의 ‘군선도(群仙圖)’(국보 139호)와 같은 명작들을 소장했던 당대 최고의 컬렉터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손재형은 특히 서예의 현대화를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독특한 형태의 서체인 소전체(素筌體)를 통해 광복 이후 국내 서예계를 풍미했다. 국내 월간 문학잡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現代文學’의 제자(題字)도 그의 글씨다.

일주문에서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조금 들어가면 오래된 여관이 하나 나온다. 수덕여관이다. 이곳엔 고암 이응로(顧菴 李應魯)의 문자 추상 암각화가 있고, 나혜석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응로는 1944년 수덕여관을 매입해 6·25전쟁 당시 피란처로 사용했고 1967년 동백림 사건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2년여 옥고를 치른 뒤 이곳에서 요양을 하기도 했다. 문자 추상은 이때 제작한 것이다.

수덕여관엔 일제강점기 나혜석(羅蕙錫)이 머물기도 했다. 남녀평등과 자유연애의 가치를 내세우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여성의 선두주자 나혜석. 하지만 가부장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다. 그렇게 심신이 피폐해진 1937년, 나혜석은 수덕사를 찾아 불교에 귀의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뜻은 좌절됐고 미련이 남았던 그는 1944년까지 수덕여관에 머물며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더러는 자식을 만나러 대전으로 길을 떠나기도 했다. 그 후 수덕여관을 나온 나혜석은 여기저기 전전하다 1948년 행려병자로 길에 쓰러져 삶을 마감했다.

번잡함을 털어내고 본질만 보여주는 대웅전. 수덕사 대웅전 가는 길은 이렇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글·사진. 이광표 교수(서원대 문화유산학)



삶이 힘든가요
많이 지쳤나요

080-788-0479

국회생명사다리

24시간 전화상담센터



지금 전화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해 주세요

힘이 되어 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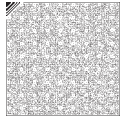
충효(忠孝)의 길

노한과 심훈 그리고 사육신의 자취를 찾아서

굽이치는 한강과 멀리 북한산까지 아우르는 장쾌한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조선시대 정승 노한의 효심 어린 효사정이 있다. 일제강점기 항일의 예술혼으로 살았던 심훈의 동상과 시비를 지나, 아버지 사도세자를 찾아가는 정조의 발길이 머물렀던 용양봉저정에서 잠시 머문다.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긴 단종을 향한 충심을 죽음으로 지킨 사람들의 넋이 살아 있는 사육신공원에서 발길을 멈춘다.

효사정





“내 목을 잘라도 죽을 때까지 독립운동을 하겠다”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한강이 굽어보이는 언덕에 그럴 듯하게 생긴 소나무 몇 그루와 기와집이 어울렸다. 조선시대 정승 노한이 몸과 마음을 의지했던 정자, 효사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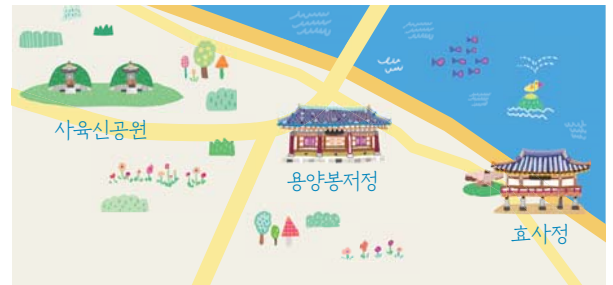
조선시대 세종 임금 때 한성부윤과 우의정을 지낸 노한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3년간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시묘를 했다. 시묘를 끝낸 뒤에도 그는 어머니 묘 옆에 정자를 짓고 등을 밝혀 마음을 다해 어머니를 추모했다고 한다.

원래 효사정의 자리는 이곳이 아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효사정의 터를 찾았는데 주변 환경이 변해서 원래의 자리와 가까운 자리를 택해 정자를 세웠다고 전한다.

효사정에서 바라보는 굽어치는 한강과 먼 데까지 터진 시야가 통쾌하다. 효사정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면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항거하는 삶을 예술혼으로 불태웠던 심훈의 시비와 동상이 나온다.

“내 목을 잘라도 죽을 때까지 독립운동을 하겠다.” 심훈(본명 심대섭)이 자신을 회유하려는 일제 앞에서 한 말이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일어났던 독립만세운동



현장에 심훈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심훈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계속되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제의 경찰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게 된다.

심훈은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처지였다. 감옥에서 나온 심훈은 흑석동 집과 가회동 큰형의 집에 머물면서 문학공부를 한다.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가 우국지사들을 만나게 된다. 그때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를 그의 예술혼에 투영하게 된다. 1923년 귀국한 그는 신극연구단체 극문회 활동을 시작했으며 연극과 영화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1930년에 조선일보에 연재하던 ‘동방의 애인’과 ‘불사

효사정에서
본 한강



심훈 동상



심훈 시비



조’는 일제의 검열에 의해 연재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해에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시 ‘그날이 오면’을 완성한다. 한강가에 있는 시비에 시 ‘그날이 오면’이 새겨졌다.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그래도 넘치는 기쁨에/가슴이 미어질 듯 하
거든/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우
렁찬 그 소리를/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그 자리에 꺼꾸
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시비에 새겨진 시 ‘그날이 오면’ 중에서 -

아버지에게 가는 길

심훈의 시비를 뒤로하고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육교가 나온다. 육교를 건너 우회전, 응달진 곳에 남은 잔설을 조심스레 밟으며 걷는다. 그 길에서 용양봉저정을 만났다.

‘용이 뛰어놀고 봉황이 높이 나는 형국의 한강 풍경’에 지어진 정자, ‘용양봉저정’. 한강대교 남단에 있는 이곳은 정조가 아버지 장조(사도세자)의 능을 찾아가던 길목에 있는 첫 휴식처였다.

용양봉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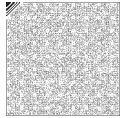


1795년 음력 2월 이른 아침 창덕궁 돈화문에서 어머니인 헌경왕후 혜경궁 홍씨를 맞이한 정조는 어머니를 모시고 수원 화성으로 길을 떠난다. 정조와 헌경왕후 혜경궁 홍씨 뒤에는 1천800명에 가까운 신하들이 행렬을 이루어 따랐다. 용산 한강가에 이른 정조는 강물에 배를 띄워 고정시키고 널빤지를 그 위에 연결해서 만든, 이른바 ‘배다리’를 건너 노량진에 도착했다. 노량진 앞에 있었던 용양봉저정에서 점심을 먹고 장승배기 쪽으로 출발했다.

정조는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순여섯 번 수원 화성을 찾았다. 그중 아버지인 장조(사도세자)의 능을 찾아가는 길이 열세 번이었다고 한다.

수원 화성은 정조가 꿈꾸었던 ‘새 시대 새 정치’의 상징이자 아버지의 넋을 기리고 그 혼을 살려 새 세상을 건설하려는 정조의 꿈이 담긴 곳이었다.

뒤주에 갇혀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정조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조는 1776년 임금의 자리에 오른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정조는 임금이 된 그해에 동대문 답십리에 있었던 아버지의 묘 이름을 ‘수은묘’에서 ‘영우원’으로 고쳤으며, 이후 수원 화산으로 옮기면서 ‘현릉원’이라고 고쳤다. 후일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되면서 ‘현릉원’에



서 지금의 이름인 ‘용릉’이라고 불리게 된다.

정조는 아버지의 능을 수원 화산으로 옮기면서 화산 부근에 있던 원래 수원 관아와 민가를 팔달산 아래로 이주시키고 화성을 축조하기에 이른다.

아버지에게 가는 길, 정조가 건넌 배다리의 북단은 현재 한강대교 북단에서 약간 서쪽이며 남단은 현재 노들나루공원 켄이다.

찢겨진 가슴 품고 다시 살아가는 사육신

용양봉저정에서 나와 지하철 노들역 방향으로 간다. 3번 출입구로 들어가서 2번 출입구로 나와 뒤로 돌아 걷는다. 남부수도사업소 노량진배수지 건물 앞을 지나 조금만 가다 보면 옛 나루터인 노량진터 안내판이 있다. 정조의 수원 화성 행차 행렬이 한강에 놓인 배다리를 건너 도착한 곳이 노량진이었다고 하니, 안내판이 있는 이곳이 그 곳이 아닐까?

노량진터 안내판 옆 이정표에 적힌 순환산책로 방향으로 가서 도로를 만나면 건널목을 건너 우회전한 뒤 편의점 앞에서 좌회전하면 기이하게 생긴 느티나무가 나온다.

느티나무를 보고 낮은 철문을 지나면 ‘역사공원길’을 알리는 작은 이정표가 나온다. 이정표에 적힌 사육신공원 방향으로 간다.

사육신공원 전망대에 도착해서 한강과 북한산이 한눈에 보이는 풍경을 보고 사육신묘로 향한다.

숙부인 수양대군(세조)에게 임금의 자리를 빼앗긴 어린 단종은 열일곱 나이에 영월에서 죽게 된다. 단종을 보위하고 따르던 많은 신하들이 세조에 의해 죽었다. 더러는 궁궐 안에서 죽었으며 한강의 백사장에서 처형당한 이들도 있다. 시신은 한강 백사장에 그대로 버려졌다. 그곳이 지금 한강대교 서쪽 어디쯤이었다고 한다. 매월당 김시습이 그 시신들을 거두어 묘를 만들었다. 그것이 현재 사육신묘의 시작이었다.

박팽년, 유응부, 성삼문, 이개, 하위지, 유성원 그리고 김문기의 묘까지 지금 사육신묘역에는 7기의 묘가 있다.

찬탈한 왕좌로 만들어낸 절대권력, 세조도 어찌지 못한 단종을 향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 죽어서 다시 살아난 그들의 이름을 불러본다. 🏠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사육신공원
내 사육신묘



‘끄물끄물’과 ‘꾸물꾸물’

우리말의 모음은 다른 언어에 비해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그로 인해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다양해졌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적을 수도 있을 정도이다. 다만 몇몇 모음은 음가가 너무 비슷해서 구분이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떤 모음은 관습음이 표기법과 달라서 맞춤법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글자로는 ‘배고프다’로 적으면서 발음은 [배고푸다]라고 한다. 모음 ‘으’는 애써 입술을 평평하게 하지 않으면 ‘우’로 소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배고프다’를 ‘배고푸다’라고 적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한국어가 모국어인 화자라면 말이다. ‘슬프다, 기쁘다, 예쁘다’와 같은 표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날씨가 ‘끄물끄물한’ 것과 행동이 ‘꾸물꾸물한’ 것을 제대로 분간해 적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몸을 오그리는 것은 ‘움추리는’ 것이 아니라 ‘움츠리는’ 것이고, 배추와 무로 김치를 만드는 것은 김치를 ‘담구는’ 것이 아니라 ‘담그는’ 것인데 헷갈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성인식을 하는 나이는 ‘스므 살’이 아니라 ‘스무 살’인데 이것조차 틀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분간하기 어려운 모음 표기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으’와 ‘우’

- 치르다(o)/치루다(x), 널브러지다(o)/널부러지다(x), 무르팍(o)/무루팍(x), 한 움큼(o)/한 움쿰(x)
- 헬쓱하다(o)/헬쑹하다(x), 모듬회(o)/모듬회(x), 흐뭇하다(o)/흐뭇하다(x), 주무르다(o)/주므르다(x)

(2) ‘우’와 ‘위’

- 구절(o)/귀절(x), 경구(o)/경귀(x), 시구(o)/시귀(x), 아구창(o)/아

귀창(x), 바위(o)/바우(x)

- 아귀찜(o)/아구찜(x), 아귀가 맞다(o)/아구가 맞다(x), 강어귀(o)/강어구(x), 머위(o)/머우(x)

(3) ‘이’와 ‘의’

- 노기를 띠다(o)/노기를 띄다(x), 띠그르르(o)/띄그르르(x), 띠글 띠글(o)/띄글띄글(x)
- 귀땀(o)/귀땀(x), 날리리(o)/날리리(x), 닝큼(o)/닝큼(x), 띄엄띄엄(o)/띠엄띠엄(x)

(4) ‘아’와 ‘애’

- 아지랑이(o)/아지랭이(x), 미장이(o)/미쟁이(x), 유기장이(o)/유기쟁이(x), 나무라다(o)/나무래다(x)
- 소금쟁이(o)/소금장이(x), 멧쟁이(o)/멧장이(x), 담쟁이덩굴(o)/담장이덩굴(x)

이 밖에도 ‘으’가 아니라 ‘이’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나지막이(o)/나즈막이(x)’, ‘느지막하다(o)/느즈막하다(x)’가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으’가 아니라 ‘어’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마터면(o)/하마트면(x)’이 그렇다. ‘으’가 아니라 ‘오’를 써야 하는 예로는 ‘하노라고 했는데(o)/하느라고 했는데(x)’가 있다.

이런 예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못 쓰기 십상이다.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규칙적인 원리가 깃들여 있다가나 뚜렷한 어원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기로 정한 만큼 약속은 약속이므로 모음을 바르게 사용했으면 한다. 📖

글. 김미형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회장(상명대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유신체제 비판한 ‘3·1민주구국선언’



‘3·1민주구국선언’으로 대법원 선고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정일형 신민당 의원이 국회의사당을 떠나는 모습(오른쪽에서 두번째). 1977. 3. 23.

1972년 10월 17일,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이 선포됐다. 이른바 ‘10월 유신’의 시작이다. 제9대국회는 유신헌법 하에 치른 첫 총선으로 한 지역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였으며 임기는 6년이었다. 여야는 임기 내내 ‘유신헌법’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김대중 납치사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민청학련 사건, 김옥선 의원 파동 등이 대표적이다.

1976년 3월 1일 저녁,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3·1운동 57주년을 기념하는 미사가 열리고 있었다. 가톨릭 신부와 정치인, 목사와 교수 등 700여 명이 참여한 미사가 끝나갈 무렵, 이우정 전 서울여대 교수(제14대 국회의원)가 미리 준비한 ‘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유신체제하의 최대 반정부 선언사건인 ‘3·1민주구국선언’의 시작이다.

선언문은 국가안보라는 구실 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 위축, 언론의 자유와 학원의 자주성 압살, 일인독재 아래 인권 유린과 자유 박탈 등을 주장하며 긴급조치 철폐와 투옥된 민주인사 석방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신헌법으로 허울만 남은 의회정치의 회복과 사법권 독립도 촉구했다.

선언문 서명 주요 인사는 윤보선·김대중·정일형·함석헌·함세웅·이우정·김승훈·문동환·안병무·이문영 등 정계·종교계·학계 지도급 인사 20명이었다. 국회의원으로는 8선의 정일형 의원도 포함됐다.

검찰은 ‘종교행사를 빙자한 일부 재야인사들의 정부 전복 선동사건’이라며 강경하게 대처했다. 이들 중 김대중 등 11명을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윤보선·함석헌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8선의 신민당 정일형 의원은 재판에서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일형의 의원직 상실로 치른 보궐선거에서 아들인 정대철 의원(9·10·13·14·16대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

글. 김종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 미국 공식방문

2019. 2. 1 ~ 2. 28

- 1 ▶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을 앞두고 구제역 발병이 잇따르자 “방역 관련 모든 기관과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합동담화문 발표
- ▶ 국방부,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부대 밖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혀
- ▶ 법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 5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두 국정연설에서 2월 27~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혀
- 6 ▶ 국립환경과학원, 1월에 발생한 최악의 미세먼지의 82%는 중국 등 국외 영향이라고 분석
-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20여 명의 대표팀과 함께 평양 방문
- 7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운동본부’가 서명운동에 나서
- 8 ▶ ‘28 독립선언’ 100주년 맞아 일본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기념행사 열려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
- ▶ 민주평화당, 창당 1주년기념식 가져
- 10 ▶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등과 함께 2월 10일부터 5박 8일간 미국 공식방문
- ▶ 경북 포항 앞바다에 규모 4.1의 지진 발생
- 12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당내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와 관련해 “국민 욕보이는 행위”라며 사과하고 당 중앙윤리위원회 소집
-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 제출
- 13 ▶ 문재인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총리실 차원에서 검증하겠다”는 뜻 밝혀
- ▶ 바른미래당, 창당 1주년 기념식 가져
- 14 ▶ 당·정·청,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해
- ▶ 자유한국당,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유예하기로
- 18 ▶ 윤리특별위원회,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 못 내려
- ▶ 검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 금지
- 19 ▶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당 원내대표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 없이 끝나다
- ▶ 법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대해 종교 아닌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으로 무죄 선고
- ▶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
- 20 ▶ 청와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 21 ▶ 대법원,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최고 연령(가동연한)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
- 22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 제안
- 25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 채택
- 27 ▶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열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당 대표로 선출
- ▶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열려

정리. 김종해

공정한 국회뉴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www.naon.go.kr에서 생생한 국회 소식을 만나보세요.

애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

2월 셋째 목요일 국회 문화극장은 1940년대 초반 일제의 악랄한 탄압 속에서도 조선어 학회 지사들이 전국 사투리들을 모아 우리말 사전을 펴낸 것을 그린 영화 ‘말모이’를 상영했습니다. 의원회관 대회의실 470석을 메운 관객 다수는 숭고한 희생으로 겨레말을 지킨 애국선열들을 생각하며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밖에도 국회 가족은 3·1운동과 임시의정원·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각종 문화 행사를 열어 뜨거운 가슴으로 독립을 외친 고결한 선조들의 삶을 기리고 있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회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100주년 행사는 민간에서도 이어집니다. 창업주가 독립군을 지원했던 대기업은 정부와 손잡고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끈 나라’를 핵심 주제로 일회성이 아니라 매달 주제를 정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호응이 좋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3·1운동 100주년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제조업이나 소매업은 물론 금융업계도 새로운 100년으로 가는 길목에서 역사적인 3·1운동과 임시의정원, 임시정부를 상업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펼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기부금을 모으고 예적금 특판도 출시합니다. 감사의 댓글 이벤트를 펼치기도 합니다.

국회보도 민족사에 특별한 3월을 맞아 ‘특집-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의’라는 특집을 통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대한민국 탄생 기초가 된 3·1운동’ 등을 통해 3·1운동과 임시의정원 100년을 밀도있게 조명해봤습니다. 3·1운동 뒤 임시정부 수립이 본격 제기된 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길목에 선 이때 국회도 제역할을 다해 새로운 100년을 위한 초석을 다지려고 합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가능성도 거론되며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계경제위기 경고음도 이어집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의 기민한 대처가 요구되는 때이죠.

국회는 1987년 개헌을 단행, 사회혼란을 수습하는 등 어려운 순간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민족은 광복 뒤 놀라운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도 이루었습니다. 여야가 선국후당(先國後黨) 정신으로 당리당략 싸움이 아닌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 과제를 우선 해결하는 저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집니다. 🏠



이춘규
홍보기획관·편집인

3월 국회문화행사



국회아트갤러리 작품전

〈active composition〉

- 기 간 : 2019. 3. 4 (월) ~ 2019. 3. 29 (금)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 작 가 : 조금희
- 전시품 : 〈색을 입히다〉 등 회화 15점
- 추 천 : 송언석 의원실
- 문 의 :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02-788-2296



국회문화극장

〈창작 판소리 백범 김구〉

- 일 시 : 2019. 3. 21 (목) 오후 7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출 연 : 임진택, 왕기철, 이규호, 고정훈 등
- 예 약 : 국회문화행사홈페이지(<http://culture.assembly.go.kr>)를 통해
3월 7일부터 예약 가능 (1인 최대 2인까지 예약가능)
- 문 의 :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02-788-3111~2

